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年 8月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논문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박 지 욱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al Plan of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Ceremony

2009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박 지 욱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창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일반사회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박 지 욱

# 박지욱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9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제2장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10
제1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근원적 배경.....	10
1. 역사적 배경.....	10
2.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과 지역주의.....	11
3. 지식인과 청년층의 높은 민주의식.....	14
제2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16
1. 제1국면기.....	16
2. 제2국면기.....	18
3. 제3국면기.....	20
제3절 사건사로 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특징.....	24
1. 비조직화된 대중들의 자발적인 저항.....	24
2. 국가폭력에 대한 부정, 자유를 향한 열정.....	24
3. 패배를 넘어선 민주화 열망.....	25
제3장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성립과 발전.....	26
제1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성립과 전개.....	26
1. 5월 단체의 현황.....	26
2. 광주민주화운동기념행사의 전개.....	27
1) 억압기.....	29
2) 투쟁기.....	37

3) 개화기.....	43
제2절 새로운 5월‘축제’의 개발.....	45
제3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정치·사회적 의미.....	48
<b>제4장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b>	<b>50</b>
제1절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	50
1. 행사 내용의 연례적 답습.....	50
2. 행사의 산업화 전략 부재.....	51
3. 대중참여의 감소.....	52
제3절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발전 방안.....	54
1. 한(恨)의 정서를 넘어선 축제의 형성.....	54
2. 전국화 방안의 모색.....	55
3.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과 인권문제와의 연계.....	57
4. 5월 단체의 역할 제고.....	58
<b>제5장 결론 및 제언.....</b>	<b>62</b>
<b>참고문헌.....</b>	<b>68</b>

#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al Plan of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Ceremony

Park, Ji Wook

Advisor : Prof. Lee, Chang-Hun. Ph.D.

Major in General Societ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t the point of view in 2009, in terms of institutional standard, '5·18' can be a historical event almost completed its settlement at least. That means that through enactment of law for compensation of concerned people wi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practical compensation in 4 times, the regainment of impaired reputation and compensation related this event have been considerably finished, and the application of sufferer is still in progressing now. May 18th is set as national anniversary day, Mangwol-dong grave boundary is upgraded as national cemetery, and its victims became national merit man.

One obvious thing is local limitation of '5·18' need to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May uprising. While '5·18' refers the event of 1980 itself, 5·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ceremony is the common concept of national democratic uprising expanded through the medium of '5·18' after 1980. '5·18' is not just exist as the event occurred on May 1980, but also it is exist with re-interpretation through 5·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fter that event. If there was no memorial ceremony, '5·18' might be remained till now as another tragic historical event

Looking at one way, '5·18' is the event occurred in Gwang-ju and



some area of Jeonnam, isolated from other areas in terms of its organizing and emotion. While it is true that 'May uprising' has a little difference depends on its period, comparatively it is the event occurred in national-wide.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re is emotional sense of distance between Gwang-ju Jeonnam area and others in the course of May uprising. However, it is same uprising in terms of its assertion that insists succession of 5-18 spirit and punishment of slaughterer at that time of 1980.

After 1980, memorial ceremony have taken leading position of national democratic activities. It is a period when uprising force of each fields concentrated through May uprising, leads uprising against contradict structure of Korean society experienced from 5-18. If we define the uprising of this period in one word, it is denial uprising. In other words, it is the uprising deny authoritarianism political power and defy it instead of yield. Such type of uprising showed most uplifted appearance through June resistance in 1987.

Before and behind of 1990's, when compensation for suffered and memorial business is in progressing, differentiation inside memorial ceremony has been started. In the progress of '5-18' and its concerned people changed from 'violent acts' and 'mob' to 'democratic uprising' and 'national merit man' respectively, May uprising also changed to various forms. This is because '5-18' collective uprising and its memorial ceremony need to be reduced as individual event in compensation processing. After that, 5-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ceremony still has taken important role for the march of history though, in fact in other aspect it also showed a many of negative forms under the name of May uprising. In addition, memorial ceremony is not presented away from actual social structure, nor '5-18' concerned people cannot live as a 'warrior' for decades. In result, among the many appearances represented in the change processing of May uprising, both the factor to be succeed and developed, and the factor to be criticised are coexist.

After the ceremony to memorial '5-18' is completely instituted and also

finished most of memorial business, memorial ceremony looking forward new direction. It means that if we say memorial ceremony until 1980's was the denial of authoritarianism, current memorial ceremony where authoritarianism political power is disappeared is considered to newly make detail subject and typ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 inside our life(from negative political power to positive political power).

Based of this kind of view point, this study look into the memorial ceremony from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of Gwang-ju democratic uprising in 1980 till current time, and trying to consider problems and developmental Plan. And based on this, the purpose is to contribute in rising systemicity, compatibility and democracy of 5·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its memorial ceremony.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의 민주화에 큰 분수령이 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도 30년에 이른다. 사실 5·18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민주화운동이라 호명할 수 있게 된 것은 몇 년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공식화의 형태를 띠기 전부터 5·18은 광주시민들에게 하나의 현실이었고, 광주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근거지였다. 이러한 5·18을 우리는 과거의 한 역사로 바라보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완벽하고 총체적인 재현이 아니며 선택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인 한 역사는 그 서술의 목적에 따라 어떤 사건들은 포함하며 어떤 사건들은 배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역사 서술이건 해방 이후 광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1980년 5월을 빼놓을 수 없다. 그날의 사건은 광주시민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고, 광주의 역사 자체가 되어왔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광주의 ‘역사’는 대만이나 오키나와,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5·18’의 경험 및 그것을 승화시킨 운동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중요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역시 해당 국가의 군사독재 및 파쇼세력에게 학살과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억압을 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 시기에 걸쳐 광주에서 진행되었던 「진상규명 투쟁 및 ‘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이나 그 이후의 보상 및 기념사업 등은 어쩌면 이들 집단이 마주칠지도 모르는, 아니 싸움을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집단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기념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동지의 식의 표현이며,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다양한 연대활동은 그 심도와 깊이를 한층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경험은 「5·18특별법」 제정 및 당시 신군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통해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면서 독재권력의 최고 통치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초 및 역사적 경험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보복적 차원을 넘어서 정

의를 실현한 사례이며,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독재체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의 경험 이래 광주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은 '5월 행사'를 지방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이 구성되는 장소이자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두고 경합하는 하나의 장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지난 세월동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축제'이자 '문화·예술 축제'로 정립되는 과정은 지역 사회 내부의 여러 계급들과 집단 간의 변화하는 정치적 관계와 긴밀히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5월의 의례적·상징적 형식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축제'로 진화한 것은 아니며 지역 내부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다양한 기원들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조건 지어지면서 5월 행사는 이 의례의 참여자에 의해 국가에 대한 강력한 대중 투쟁의 수단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를 변형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문화·예술 축제로써 근래에 활발해진 지방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시도들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광주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차지해 온 특수한 지위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는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중심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 및 전개과정, 의미 등을 살펴보고,

둘째, 1980년 5월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성립과 전개, 정치·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고,

셋째,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통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체계성, 민주성, 화합성, 선진화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 1.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매년 5월이면 치러지는 광주의 범시민적 의례인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의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회의 의미나 가치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Weber나 Durkheim과 같은 고전 사회학자들은 의례를 도시화와 근대화의 진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소멸할 구시대의 유물이나 평형 상태에서 이상적인 사회적 연대의 투사점으로 생각해 왔다<sup>1)</sup>. 그러나 의례는, 도시와 합리성에 대한 Weber의 생각과는 달리 도시화와 근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정부와 같은 행위자에 의해 채택되어 ‘전통’으로 발명되기도 하며<sup>2)</sup> 또한 의례가 평형 상태에서 이상적인 사회적 연대의 투사라는 Durkheim의 기능주의적 통념과도 달리,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이 서로 이질적이거나 때론 모순적인 정체성을 제시하는 경합의 장을 제공한다.<sup>3)</sup>

한편으로 의례는 정치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속 집단에 의해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적대를 표현하는 하나의 사회적 실천의 형태일 수 있는데, 이러한 ‘저항 의례’는 피억압자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그들에게 자기 표현의 수단을 제공할 수도 있다.<sup>4)</sup> 물론 이러한 저항 의례들은 우회적이고 공허한 품잡기에 불과하거나 그 효과는 “정치적인 의식의 고양에 제한”되고 따라서 의례 자체의 직접적이고 도구적인 중요성은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아가 순수히 상징적인 것의 경계를 초월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폭력 행위들로 상승하는, 대중적 항의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듯 의례들의 “영역은 그것의 정치적 기능에서 ‘반란 의례’와 같이 확립된

1) 정문영, “광주 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8), p.5.

2) 정은주,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3), p.22.

3) Schnell, Scott, 1995, “Ritual as an Instrument of Political Resistance in Rural Japan,”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vol. 51. 정문영. “광주 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8), p.6에서 재인용.

4) 김광억, “저항문화와 무속의례”, 「한국문화인류학」 no23, 1993, p.55.

질서의 유지로부터 그 질서에 대한 항의와 저항, 폭력의 접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sup>5)</sup> 그리고 의례라는 단일한 현상이 한편으로는 권력이나 질서에 봉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질서를 부추기고 피억압자들의 해방의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는 모순적인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의례에 대한 해석들이 지니는 이러한 모순은 단지 구별되는 분석의 범주로서 의례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 해소될 수 없으며, 보다 확장된 사회·역사적 분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듯 서로 다르고 심지어 대립적인 측면들은 서로 다른 의례들의 각기 다른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의례의 시간에 따른 변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트리니다드의 카니발(carnival)은, 노예 해방 이전에는 무엇보다도 그 섬의 백인 농장주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지배를 표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연출되었지만, 노예 해방 이후에는 흑인들에 의한 항의와 저항의 표현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에 의해 충분히 통제되고 감독되는, 여러 민족 간, 계급 간의 국민적 통합의 축제(festival)가 되었다.<sup>6)</sup>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바탕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방향 역시 위에서 언급된 ‘국민적 통합의 축제’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기념행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고찰함으로써 5·18정신을 보다 선양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이 기념행사가 산업화와 세계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발생배경 및 전개과정 등은 이미 많은 연구자 및 공공기관들에 의해서 분석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와 논문, 사료집 등으로 출판되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주요사건들과 증언들을 모아 펴낸 「광주민중항쟁 비망

---

5) Abner Cohen, *Drama and Politics in the Development of a London Carnival*, 1980, p.83.

6) 정문영, 전계서, p.6.

록-망월동 묘비명」,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무등산 깃발」 등을 통해 비교적 자세하게 당시의 전개과정과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 외에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5·18광주민중항쟁’의 발생 원인으로 계급적, 민족적 모순을 언급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 국가권력의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온 반공이데올로기와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저항이라고 규정하였던 김세균의 「5·18광주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선언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이론적인 치밀함이 부족했음을 비판하며,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과학적 분석을 시도한 나간채의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현재적 의미와 인권운동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한 김두식의 「5·18에 대한 의미구성과 재해석의 변화과정」, 10·26에서 5·17까지의 정세, 12·12쿠데타세력의 평가 등을 기술한 서중석의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미」,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 원인, 전개과정, 의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정해구의 「광주민중항쟁 연구」 등이 있다.

관련 연구 및 자료들의 주요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5·18광주민주화운동 발생과 전개에 관한 주요 문헌

저자	문헌명	발행처	발행연도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광주민중항쟁비망록-망월동 묘비명」	도서출판 남풍	1989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무등산 깃발」	도서출판 남풍	1989
서중석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미」	역사비평사	1989
김세균	“5·18 광주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 「역사와 현장1」	도서출판 남풍	1990
정해구	「광주민중항쟁 연구」	사계절출판사	1990
나간채	「광주민중항쟁과 5월 운동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김두식	“5·18에 대한 의미구성과 재해석의 변화과정”	한국사회학회 학회발표 논문	1998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료들은 비교적 충분하였으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기존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가 사료 분석과 역사적 가치, 의미분석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살펴본 연구들은 그 분석의 틀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방의 아이덴티티, 지역주의, 남도의 문화, 향토축제 등과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의 그 전개를 시도하였으며 인류학적 연구 성과들과도 접합되어 상당히 복합적인 학문의 성향을 드러내었다.

정근식은 「지역정체성과 상징 정치」에서 지역이미지와 시민적 정체성, 민주성지론의 형성과 전개, 예향론과 상징투쟁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정호기는 「5·18기념행사와 기념사업」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각종 사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윤기봉은 「5·18기념행사의 발전과정과 문제점」을 통



해서 연례적으로 개최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한국의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이 기념행사가 광주의 정체성으로서 가지는 그 의미와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역문화 축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임동학은 각 지역마다 솔하게 열리고 있는 지역문화축제의 진정한 원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 해준은 「다시 쓰는 전라도 역사」에서 전라도민의 특징을 한이 서린 서민문화, 풍류의 고장, 충절의식이 뚜렷하다 등으로 규정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여 주었다. 정문영은 「광주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를 통해 1980년 이래 광주의 5월이 일종의 ‘관광 상품’ 이자 ‘문화·예술 축제’로 정립되어 가는 과정을 국가와 지방 및 지역 사회의 권력 관계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연구의 분석과 관련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표2>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관한 주요 문헌

저자	문헌명	발행처	발행연도
이해준	「다시 쓰는 전라도 역사」	금호문화	1995
강은주	“도당제를 통해서 본 공동체 의식의 지속과 변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정근식	“지역정체성과 상징 정치”, 「경제와 사회」 30	한울	1996
임동학	「지역문화축제의 현황과 과제」	문화저널	1997
나간채	“5월 ‘행사’에서 ‘축제’로”, 「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민형배, 오재일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의 평가와 전망」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9
정문영	“광주오일행사의 사회적 기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윤기봉	“5·18기념행사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정호기	“5·18기념행사와 기념사업”, 「5·18민중항쟁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생 배경과 전개, 특징들을 살펴보고 1980년 이후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시작된 다양한 형태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인사들의 인터뷰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 특징, 전개과정, 배경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둘째,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1980년 5월 이후로 행해지고 있는 추모식, 위령제, 관련 시위 및 행사 등을 총칭한다.

셋째,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 및 전남 지역일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그 중심이 광주인 바, 광주를 중심으로 사건사를 살펴보았으며, 기념행사 또한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기념행사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성립과 전개, 그리고 이러한 기념행사가 ‘축제’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기념행사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도 담아보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그 기념행사가 주는 의의, 향후 발전방안과 관련 연구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하여 제시해 보았다.

## 제2장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

### 제1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근원적 배경

#### 1.역사적 배경

전근대 사회에서의 민중은 통치의 대상으로 착취와 탄압만을 강요 받아왔다. 평등 사회인 원시시대를 제외하고 고대국가나 중세사회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후기까지 그러한 틀은 깨지지 않았다. 한국사에서 근대사회의 시작으로 보는 1860년대에 이르러 평등과 자주독립 개혁사상을 가진 동학이 등장하였다. 근대사회는 반봉건의 민주화 반외세의 자주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당하기만 하던 농민을 의식화, 조직화된 역사의 주체로 이끌었고 갑오경장을 통해 수천년간 계속되어온 전근대사회는 제도적으로 붕괴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정신은 계승, 발전되어 민주-민족운동의 원동력 되었으며 근대사의 서막으로 역사발전을 이끌어 나갔다<sup>7)</sup>.

한말 국민의식의 성장과 민주시민 훈련을 위해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하여 토론회, 강연회, 시위활동을 통해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제침략자들이 무력을 앞세워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거국적인 민중운동이 전개되었으니 자결을 통한 항의, 상소활동, 연론을 통한 반항 운동, 오적암살활동, 밀사파견 등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가장 격렬한 항일투쟁인 의병활동은 유생층의 주도에서 점차 민중의 주도로 변하였고 그 중심은 전남의병으로 전남의 전지역에서 의병이나 그 지원세력으로 최후까지 격렬한 항쟁을 전개하였다<sup>8)</sup>.

일제시대 3.1운동을 통하여 국민대중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항일의식을 표출하였으며 이는 국내외의 독립투쟁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과 친일지주들의 수탈로 이종고를 겪은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소작쟁의를 벌이고 노동단체와 결합하여 강인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남지방의 농민들이 있었다<sup>9)</sup>.

7) 강현아, 「5·18항쟁의 이해」, 광주: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p.8.

8)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2」, 서울:역사비평사, 1994, p.25.

9) 안종철, 「광주전남지방현대사연구」, 서울:한울아카데미, 1991, pp.34-36.

한국사회에서 학생층은 진취성이 강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열정과 용기가 가득하며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왔다. 일제의 식민통치와 차별교육에 항거하여 일어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학부모들의 분노와 민중정서를 대변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높일 수 있고 3.1운동 이후 최대의 민중운동이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받아야만 했다.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김구의 상해 임시정부 등 민족역량을 결집한 통일국가 건설의 노력이 있었지만 미소의 불안정으로 그 존립은 위태로웠다. 해방이후 정치세력과 민중들은 분단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대립과 갈등에 당황하였으며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본주의에 편입되었다.

냉전체제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6.25가 일어나고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었으며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는 날로 강화되었다. 정치세력이 약한 이승만 정권은 일제의 잔재 청산은 엄두내지 못하였으며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기 집권을 위한 이승만의 부정행위에 참을 수 없었던 민중들은 4.19혁명은 민중의 뜻을 통하여 독재정권이 몰락된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시민혁명으로 정권이 물러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통일문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기 이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등장하게 된 박정희정권은 월남파병, 노골적인 지역차별정책, 남북의 간의 대립과 적대관계를 조장하였다. 이에 불만이 쌓인 노동자들이 일으킨 YH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부마항쟁을 통해 민중의 반항이 시작되었고 서울과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중운동이 전개되었는데 당시 정권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별 받고 소외당했으며 정의감이 강한 전남지방에서 특히 거세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광주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독재정권에 대한 강렬한 항쟁의 형태로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

## 2. 한국자본주의의 모순과 지역주의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로써 박정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유신체제를 연장하려는 신군부 세력의 12.12사태로 인해 민주화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민주인사를 구금하고 국회와 학원이 점령당했다. 신군부는 재야민주화운동의 중심축인 김대중과 민주화운동의 열기가 높았던 광주를 제압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에 광주 시민은 분노하였고 더욱더 단합하여 거칠고 힘든 민주화 운동을 이어나갔으며 무장투쟁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광주인가.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국민적 실천은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고 노동계와 농촌도 가담하였다. 이때 민주화운동은 지식인이 주도하였으며 서울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신군부의 탄압이 노골화되어 나타나자 서울은 침묵하였고 광주는 이와 다르게 대응하였다.

광주에서 일어난 ‘항쟁’은 한국자본주의화에서의 구조적, 지역적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 생활상의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유신독재하에서의 경제개발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 국가의 시장과 기업에 대한 개입, 간섭, 보호정책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바 ‘지도받는 자본주의’로 만들었다. 이에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었다. 첫째로 대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국민경제가 대외 무역과 해외경제의 동향, 특히 미국자본주의의 흐름에 좌우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이 쇠퇴하고 재벌 중심의 독과점체제가 성립되어갔다. 이는 국민경제의 기반이 왜곡되고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한 결과 농림수산업 부문에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저발전에 머무르는 등 산업 부문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갔다. 넷째, 박정희 정부의 ‘차등성장전략’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국민차원의 합의와 수용을 거치지 않고 정책자의 연고주의가 연관되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어 갔고 배제된 지역에서 차별과 소외의 정서는 그만큼 확산되어 갔다<sup>10)</sup>.

이처럼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농·어업의 희생, 농촌의 해체

10) 강현아, 「5·18항쟁의 이해」,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p.43.

등을 바탕으로 지역불균형을 확대하면서 진행되었으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의 희생이 강요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960~70년대 전남은 침체와 낙후를 면하지 못하였다.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적 발달과 박정희 정부의 농산물 저가격 정책의 산물로서 농·어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이 가장 컸던 지역은 전남이었다. 전남지역은 농업중심 지역으로 산업부분이 취약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1966년 전남지방에는 비교적 많은 영세기업과 소기업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면서 이러한 영세기업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중화학 공업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남의 기업은 보잘 것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호남권의 소득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았으며 공공업이 부진하고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미흡하여 농촌의 이동 인구를 흡수할 수 없었다. 이처럼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 전에도 산업화 정도에서 지역 격차는 있었지만 공업단지 조성정책의 지역적 선택과 차별적 요소로 인해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공화당 정권은 성장과 개발의 극대화를 위하여 차등성장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것은 연관 효과가 큰 전략산업을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한된 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선택의 소산으로서 대외의존수출 지향선이 미국과 일본 등의 해양권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정책입안의 연고지 중심이었다고 하는 사실도 개재해 있었다. 이는 곧 지역차별로 귀결되었고, 곧 경부선 위주의 성장거점 개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타 지역은 경제력이 약화되었으며 이것은 호남인들에게 상대적 소외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배타적 권력집중을 통하여 강권과 억압기구를 운용하고 그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는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지역불균형이 증폭되었고 이 과정에서 권력의 독재화와 독점화는 노골화되어 갔으며 호남의 차별과 배제에 따른 소외감과 박탈감은 심화되었으며 이는 투표형태에 반영되었다.

5. 16쿠데타 이후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은 박정희에게 많은 표를 몰아 주었지만 1967년 선거부터 호남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지역 편향적 차등성장정책에 대한 영남의 전폭적 지지와 호남의 부

분적 반발의 표현이었다. 1971년 선거에서는 김대중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정권 출현에 힘을 모았다. 이렇듯 호남은 선거행위를 통하여 박정희 정권의 지역차별을 반대하고 이에 저항하며 새로운 정부의 출현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유신헌법 하에서 호남은 이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독재, 독점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호남차별과 배제는 더욱 노골화 되어갔고 그에 따른 소외와 회한은 더욱 깊어져 갔다.

### 3. 지식인과 청년층의 높은 민주의식

광주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지식인과 청년학생이 선도하는 민주화운동이 전개되었다. 1972년 12월 5일 전남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함성'이라는 유신반대 유인물 살포는 사회적 파급은 적었지만 전국 최초로 시도된 유신반대운동이었다. 1974년 봄, '전국민 주청년학생총연맹'운동이 일어나고 이로써 민주화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광주에서도 이에 참여하였으며 그 참여인원이 서울 다음으로 많았으며 조직의 활동력이 두드러졌다.

1975년 민청학련 관계자들이 출감하면서 지역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학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던 이들은 생활전선에 뛰어들면서 사회 각 부문운동에 참여하였다. '현대사회연구소'를 설립하여 사회운동권의 결집을 모색하였으며 이로부터 양심적 지식인, 종교인과 청년운동세력은 노동계와 농촌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를 갖출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의 성과로 '함평고구마피해보상투쟁'이 성공할 수 있었다.

대학교 내에서도 점차 의식화동아리가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1987년 6월 27일 '우리의 교육지표'가 발표되었다. 한국 교육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교육문제를 전면화하였다. 교육지표 운동은 전국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광주 지역운동은 한층 강화되었다. YWCA에서 결성된 양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는 운동은 당시 학생들에게 암기식 교육의 허상과 사립학교의 권위주의적 부조리를 의식하게 하였고 학생들은 사회 모순을 자각하는 의식의 변모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 대학문화운동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순수예술 중심의 문예활동을 비판하고 리얼리즘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민족문화 운동을 펼치



려는 의식적 자각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민주화 의식이 싹트고 있을 때 박정희의 죽음으로 민주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규하 정부와 계엄당국은 민주세력에게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민당과 재야민주화세력들은 해결방식은 다르지만 이에 반대하였다. 광주에서도 재야민주단체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1980년 봄, 구속 제적학생들이 복학하면서 학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전남대, 조선대에서 학원자율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운동은 양심적 교수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 학생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냈다.

학원자율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사회 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갔다. 학생들의 민주역량이 한층 신장되면서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공개, 유신잔재 척결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민생문제를 집중 부각시켰다. 4.19제전 이후에는 농업·농민문제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4월 25일 전남대 총학생회는 광부들의 생존권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과 농민에 대한 구조적 수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청년학생운동은 양심적 교수, 지식인, 기독교계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며 큰 지지를 받았다. 끊임없이 일어난 민주화에 대한 움직임은 5월에 들어서면서 신군의 공세징후가 분명해짐에 따라 긴박하게 돌아갔다. 5월 7일 전남대 총학생회는 8일부터 지속적인 민족민주화성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8일 전남대 총학생회와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공동명의로 '제 1시국선언문'을 채택, '5월 4일 이내 비상계엄령 즉각 해제, 휴교령 거부, 대학인의 행동 통일'을 결의하였다. 서울에서는 13일이 지나면서 자진 해산하였으나, 광주의 시내 집회는 16일까지 계속되었다.

5월 15일 '유신잔당의 국권 찬탈 음모를 분쇄하고자 우리 대학인의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여 반민주 반민족 세력과의 성전을 엄숙히 선포한다'는 제2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따 15개 강령을 채택하였다. 여기에 농촌문제, 노동자문제, 학원문제, 계엄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이때에 이미 군부의 반격에 대비한 행동 방침에 대하여 시민과 학생의 암묵적 합의가 도출된 것이었다.

## 제2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

대다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을 사건사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건사별로 구별하여 파악할 경우 흐름의 파악이 쉽고 각 사건이 주는 시사점들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밝히는데 보다 용이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전개과정을 사건사를 통하여 살펴보되, 크게 다음의 3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를 시작으로 행해진 시위의 시작과 공수부대의 본격적인 진압 작전 실시까지를 제1국면기,

공수부대의 무차별한 진압작전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항거하여 일시적 소강상태를 이루었던 시기까지를 제2국면기,

그리고 전남도청이 최종적으로 함락되는 시기까지를 제3국면기로 제시하여 보았다.

### 1. 제1국면기

#### 1) 계엄확대 조치와 산발적인 학생시위

17일 자정을 기해 선포된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를 전후하여 전남대, 조선대를 포함, 광주 시내 각 전문대와 관공서 등에 계엄군이 진주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 조선대 학생 69명이 연행되었다.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햇불시위 때 휴교령이 내리면서 전남대 정문 앞에서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귀가를 종용하는 계엄군과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이 최초의 충돌로 인한 학생들의 시내진출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첫 도화선이 된다. 흩어진 학생들은 광주역 앞에서 재집결, 시외버스 공용터미널과 금남로 일대서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출소에 투석하는 등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그런데 시위대열에 대한 경찰의 태도는 지난 16일까지의 시위진압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흩어지는 학생들을 골목까지 뒤쫓아가 곤봉으로 구타하고 차에 태워 싣고 갔다.

학생들은 총장로, 한일은행 앞, 광주공원 등 곳곳에서 계엄확대와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위대열의 숫자는 불어났다.

## 2) 공수부대의 진압작전

수창초등학교에 집결한 공수부대가 조를 재편성해 시내 각 곳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모두 철망이 부착된 철모를 쓰고 등에는 총을 메었으며 대검과 곤봉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한편 오진의 수동적이고 산발적인 시위와 달리 학생들은 적극적인 공격의 형태로 이들과 맞서게 된다.

광주공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는 도청 쪽으로 진출해 학생회관 앞에서 경찰과 충돌, 페퍼포그차 한 대를 불질렀으며 파출소를 파괴하였고 농장다리 부근에서는 버스에 탑승해 있는 경찰들을 무장해제시켜 인질로 잡기도 했다. 시위대의 가두투쟁이 적극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7공수에 이어 11공수가 광주로 투입되었고, 여단병력으로 증강된 공수부대와와의 충돌 또한 더욱 치열해진다<sup>11)</sup>. 공수부대는 집안까지 쫓아 들어가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을 끌고 갔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곤봉과 대검을 휘둘렀다.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가 시작된 것이다<sup>12)</sup>.

## 3) 일시적 소강상태

분노와 공포의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시내상황을 살피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금남로로 모여들었다. 초, 중, 고등학교와 관공서, 일반기업체는 정상근무를 계속했으나 시내의 상가들은 대부분 철시했다. 대동고와 중앙여고 등 일부 고등학생들이 교내시위를 주도하게 되고, 오후로 접어들수록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날 오후 시내 중·고교생들을 귀가 조치시켰다. 7공수여단이 11공수여단에 배속되고 31사단 병력을 재배치시키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탱크까지 동원한 공수들의 진압에 시위군중은 방화와 투석, 화염병 투척으로 맞섰다<sup>13)</sup>. 녹두서점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화염병이 대량으로 제작되었다. 화염병은 투석이나 도로변의 대형화분을 바리케이드로 이용하는 소극적 방어와

11)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2000, p.41.

12) 상계서, p.42.

13) 월간말, no.23, 1988, 5, 서울:월간말, 상계서 p.43에서 재인용.

는 달리 공격용으로 등장한 새로운 무기였다. 이처럼 심각하게 진행되는 시위상황은 11공수여단장으로 하여금 현장 점검에 나서게 했고, 현지 지휘관은 시위진압을 위해 1개 공수특전단을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4)</sup>

## 2. 제2국면기

### 1)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항거

공수부대의 강한 진압작전에 위축되어 있던 시민들은 이제는 공포감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움에 가담하게 된다. 시민들의 이러한 참여와 투쟁은 학생시위에서 민중항쟁으로 질적인 변화를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치열하고 공세적인 국면으로 상황이 변화된다. 가톨릭센터에서는 경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총과 방패를 빼앗았으며 광주교 앞에서는 시민들에게 포위 당한 장갑차에서 최초의 발포가 있었다. 이날 밤 시내 중,고등학교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계엄군이 3특전여단으로 교체되고 20일 오전부터는 시위진압의 양상이 달라진다<sup>15)</sup>.

### 2) 민주기사들의 봉기

버스와 택시를 세워놓고 젊은이들을 무작정 끌고 가는 과정에서 기사들이 구타, 연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서 모여 대형버스와 트럭을 앞세우고 일시에 금남로로 몰려왔다. 금남로를 가득 메운 이들의 경적과 헤드라이트 불빛은 시위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sup>16)</sup>.

시위대는 도청을 지키는 군경을 포위하고 점전을 계속했으며 시위는 밤까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MBC방송국, 노동청 그리고 세무서 등이 불탔다. 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시민의 손에 장악되었고 이날 밤으로 시외전화도 두절되었다.

도청과 광주역 양쪽으로 몰린 공수부대는 급기야는 시위군중을 향해 집단발포하기에 이른다.<sup>17)</sup>

14)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취재일지;광주사태” 「월간조선」, no.64, 1985, 7, p.76.

15) 경향신문, 1988. 5. 18.

16)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취재일지;광주사태” 「월간조선」, no.64. 서울:조선일보사, 1985. p.77.

### 3) 계엄군의 발포

#### 가. 차량탈취(21일 오전)

광주역에서 옮겨온 시위대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시민들로 금남로 일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많은 희생자를 냈던 지난밤의 총돌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아세아자동차 공장으로 달려가 장갑차와 군용트럭 등 많은 차량을 끌고 왔다. 이렇게 동원된 차들은 외곽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중심가로 수송해 오기도 하고, 시외로 진출해 광주의 소식을 알리는 등 기동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차량시위가 전개된다. 시위소식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강한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곳마다 주먹밥과 음료수 등을 제공해 주었다<sup>18)</sup>. 한편 도청 앞에서 계엄군과 팽팽히 맞선 시위군중은 대표를 선정해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도지사를 내세워 협상을 벌이던 그 시각, 도청에서는 헬기를 이용해 시체와 기밀문서를 빼돌리는 한편, 실탄이 지급되는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sup>19)</sup>

#### 나. 집단발포(21일 12:00~13:00)

12시까지 퇴각하겠다는 계엄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시민들은 차량을 앞세우고 도청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장갑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시위대를 앞질러 분수대를 돌아질주, 전남대 쪽으로 빠져나갔고 트럭에 실은 기름통에 불을 질러 밀어붙이는 일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sup>20)</sup> 전일빌딩으로 가로질러 포진해 있던 공수들이 분수대까지 밀려났다. 시민들이 이렇게 서서히 계엄군을 도청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때 발포가 시작되었다. 승리감에 들떠 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무장의 필요성이 절박해졌다. 시민들은 무기탈취를 위해 곧바로 시외지역으로 빠져나간다. 같은 시간, 전남대 정문 앞에서도 수위실에 설치된 기관총 제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발포가 있었다.

17) 한국현대사료연구소 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서울:풀빛, 1990, p.51.

18)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2000, p.95.

19) 월간말, no.23, 1988, 5, 서울:월간말, 상계서 p95에서 재인용.

20)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취재일지:광주사태” 「월간조선」, 1985,7, no.64,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2000, p.103에서 재인용.

#### 4) 무장봉기

##### 가. 무장시민군의 등장(21일 오후 13:00~17:00)

화순, 해남, 나주 등 시외지역으로 진출한 시위대는 지역주민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알리고 지서, 경찰서, 군부대 등을 털어 다량의 총기를 탈취해 돌아왔다. 이 무기들이 오후 3시경부터 시민들에게 지급되어 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 싸움은 이제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전개되었다<sup>21)</sup>. 이날 도청 앞 전투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시내병원 앞에서는 헌혈을 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줄을 섰으며 시민들의 무기량과 무기 소지자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며 총기조작법과 간단한 군사교육 후 사격에 능한 시민들로 특공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무장한 시민군의 등장과 총격전, 전남대병원 옥상에 설치한 LMG의 위력에 눌려 계엄군은 퇴각을 서두르게 된다.<sup>22)</sup>

##### 나. 계엄군의 퇴각(21일 오후 17:00~20:00)

계엄군은 22일로 예정되었던 철수작전을 하루 앞당겨 감행하게 된다. 전남대 내에 주둔해 있던 3공수는 오후 2시경 철수명령을 하달받고 교도소로 이동했으며, 도청에서 시민군과 교전 중이던 35대대와 11여단은 조선대 뒷산을 넘어 화순 길목의 주남부락으로 철수했다.<sup>23)</sup>

### 3. 제3국면기

#### 1) 해방기간<sup>24)</sup>

##### 가. 수습위원회의 구성

계엄군이 물러가고 도청이 시민군의 손에 들어왔다는 소식은 밤사이 광주시 전역에

21)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서울:한울, 2000, p.110.

22)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취재일지:광주사태” 「월간조선」, no.64, 서울:조선일보사, 1985,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서울:한울, 2000, p.110에서 재인용.

23) 월간말 no.23, 서울:월간말, 1988, p.42.

24) 나간채, 「5·18항쟁의 이해」 중 제4장 “5·18항쟁의 선전:승리한항쟁의 역사”를 요약하여 구성하였음.

전해졌다. 흥분과 감격에 젖어 이른 아침부터 도청으로 몰려든 시민들은 속속 발표되는 사망자 숫자와 처참하게 일그러진 시체들을 보며 계엄군의 잔학상에 치를 떨었고 앞으로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도청 앞에서 궤기대회를 가졌다. 시민들은 자체치안 확보와 질서확립을 위해 스스로 거리를 청소하고 경계근무를 섰다. 해방기간 광주에서는 큰 안전사고 없이 생활물자를 나누어 쓰고 시민군들에 적극 협조하는 공동체 생활을 꾸려나갔다.

지난밤 지역방어 전투에 참가한 시민군은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차량을 등록시켜 임무를 부여했으며, 무장시민군을 재편성하여 각 지역으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등 자체 조직과 병력을 통제해 계엄군의 반격에 대비했다.

도청에서는 시내 유지급 인사, 목사,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5·18수습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요구할 협상조건을 토론했고 무기회수를 시작하였다. 일부 도청수습위원들의 구성에 불만을 느낀 홍남순, 김성용, 송기숙 등 재야인사들도 남동성당에서 따로 모임을 갖고 수습대책을 논의하였다. 5·18수습대책위원회는 회수한 무기 중 일부를 가지고 상무대 전남북계엄분소를 찾아가 7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계엄군 측과 협상, 오후 5시경 협상결과를 도청광장에서 보고하였다. 그러나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계엄사의 요구와 피의 대가를 보상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엇갈린 가운데 협상의 내용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협상대표를 향해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sup>25)</sup>. 저녁때쯤 김창길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무기회수를 둘러싸고 수습회 내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일부 시민은 무기를 반납했으며, 일부는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해 이러한 갈등은 결국 강·온대립으로 갈리게 되어 25일 새로운 항쟁지도부를 탄생시킨다. 시위는 목포, 해남, 강진 등 시외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무기 탈취와 차량시위가 계속되었다.

주남부락과 교도소 부근에서는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총격전이 끊이지 않았고, 계엄군의 통합병원 확보를 위한 진격으로 화정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22일 존 위컴 주한연합사 사령관의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는 한국군을 군중진압

---

25) 임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서울:사계절, 1988, pp.137-138.

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또한 오키나와에 있는 조기경보기와 필리핀 수빅만에 정박 중인 항공모함 코럴시호를 한국 근해에 긴급 출동시키기로 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었다<sup>26)</sup>.

#### 나.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

도청 앞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23일 오후부터 매일 오후 2시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노동자, 시민, 학생, 가정주 등 각계각층 사람들이 분수대 위로 올라가 계엄군의 만행을 성토했고 앞으로의 수습대책을 토론했다. 또한 그때 파악된 피해상황이 보고되었으며 장례준비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도청의 ‘수습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계엄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일방적인 무기반납만을 주장함에 따라 수습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갔다. 시민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했으며 도청 내부에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경계하는 등 분위기가 살벌했다. 시민군 중에도 무기를 반납하는 사람이 차츰 늘어났다.

궐기대회를 준비해 온 청년, 학생, 노동자들은 YWCA에 모여 도청의 수습위로는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토론에 참석한 청년들이 25일 발족되는 항쟁지도부의 핵심을 이룬다.

무기를 반납해서 희생을 줄이자는 의견과 우리의 요구사항이 전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으로 학생수습위 내부에서도 강·온건파의 대립이 팽팽히 맞섰다. 결국 수습위원 일부가 조직에서 이탈됨에 따라 박남선 등 일반인을 포함시켜 학생수습대책위 기구를 개편했으며, 25일 김창길이 학생수습위원장직을 물러나면서 수습위원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윤상원, 정상용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발족되었다.

#### 다. 항쟁지도부의 탄생과 활동

새로 구성된 항쟁지도부는 그 명칭을 수습대책위원회에서 민주시민투쟁위원회로 바꾸고 무장투쟁을 준비해 가는 한편, 시민들의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정립해 갔다. 아침 일찍부터 각 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시민생활 정상화에 노력

---

26) 동아일보 1980. 5. 22.



했으며, 기동타격대로 재조직된 무장병력은 시내순찰과 계엄군의 동태 파악, 치안유지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26일 새벽, 계엄군이 탱크를 앞세우고 농성동 한전 앞까지 진입했다는 소식이 도청 상황실에 보고되자 전 시민군에게 비상령이 떨어졌다.

계엄군의 세 차례에 걸쳐 최후통첩을 보내왔으며, 계엄군의 광주시내 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갔다. 이날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시민들은 심한 고립감과 불안 속에 밤을 보냈고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광주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후의 항전에 대비했다. 기동타격대 대원과 투쟁위원회,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예비군, 학생 등으로 조를 편성하여 도청 방어작전에 돌입했다. 계엄군이 들어오는 길목에도 병력을 배치하였으며, 이미 지역방위군이 편성,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 2) 도청 함락

외곽지역의 시민들로부터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도청 행정 전화가 끊기자 도청 상황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홍보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광주시내 전지역을 돌면서 가두방송을 했다.

27일 새벽, 계엄군은 가공할 무기를 앞세우고 총정작전을 개시한다. 시민군은 계엄군에 맞서 끝까지 싸웠으나 뒷담을 넘어 들어온 특공조의 후방공격과 무차별한 사격으로 순식간에 전투력을 상실 당하였으며 YWCA를 지키던 사람들도 진압되고 말았다. 전 기간을 통해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생존자들은 도청 방화자, 총기 소지자, 특수폭도 등으로 분류되어 군부대로 이송되었다.

## 제3절 사건사로 본 광주민주화운동의 특징

### 1. 비조직화된 대중들의 자발적인 저항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저항의 계기들이 비조직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점이 오히려 저항의 폭발력을 높인 요인이었다. 즉 항쟁을 이끌어간 주체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참상을 목격하면서 즉자적으로 항쟁에 참여한 경우들이다. 설령 1970년대 사회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이 항쟁에 참여한 경우에도, 그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조직되지 않은 대중들이 즉자적인 저항이 모여 항쟁을 구성하였지만, 5·18 당시의 항쟁은 특정 조직에 의해서 지도되는 저항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비조직적인 대중들이 항쟁의 주요 국면에서 창조적으로 다양한 촉발계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항쟁이 발생하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이 대규모의 처절한 저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총을 든 무장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의 간부들도 피신하였던 것이다. 또 당시 시민들의 분산적인 저항이 대규모 민중봉기로 나아가는 것을 주도한 조직은 없었다. 대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생적 저항이 전체 대중들의 봉기를 만들어 내기에 이른 것이다. 대중들은 서로의 참여를 통해 힘을 얻으면서 자생적인 저항의 주체가 되었다. 평상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민군의 등장은 그 좋은 예이다. 그것은 오직 대중적 저항이 지닌 자생성의 표현이며, 저항의 와중에서 표출되는 창조적인 힘이었다.

### 2. 국가폭력에 대한 부정

5·18로 인해 만들어진 시민들의 저항이 일종의 절대공동체를 형성했다면,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국가폭력의 잔인함과 무차별성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근대 국가는 그 자체가 폭력의 독점이지만, 문제는 그러한 폭력의 행사가 사회적 수준에서 동의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국가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일반 국민들

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규정될 때, 그 만큼 저항의 가능성은 커진다. 또 무차별적인 폭력의 사용은 폭력의 대상이 될 사회집단으로 하여금 강력한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저항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선택적인 폭력의 사용은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5·18 당시 계엄군의 폭력은 광주 지역민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지만, 그 행사방식도 매우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당시의 진압작전은 그 만큼 높은 저항의 가능성을 내포한 상태였다.

그렇다면 대중들의 저항이 지향하는 지점은 어디였을까? 폭력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통해 정당화((justification)되어야 한다.<sup>27)</sup> 이러한 관점으로 살펴볼 때 분명한 지향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18 당시 참여한 대중들이 정당성 없는 국가폭력에 대항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즉 당시 대중들은 국가폭력에 반대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관념 속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와 그 속에서의 자유로운 삶을 그렸던 것이다. 물론 그때의 민주주의 국가의 상은 과학적이지 않으며, 대중들의 소박한 염원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보여주었다. 후일 대동세상이라고 부르는 항쟁 당시 광주의 모습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3. 패배를 넘어선 민주화 열망

21일 저녁 광주지역에 해방공간이 만들어진 이후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것은 27일 새벽이었다. 그날 계엄군이 다시 광주 시민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작전을 전개하면서 계엄군과 시민군 사이에 시가전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양측의 무장병력은 비교가 불가능하다. 무장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헬기 등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무기를 동원한 계엄군과 대부분이 칼빈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실탄 마저 부족한 시민군 사이의 싸움이었다. 병력 수 역시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조직적인 역량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민군의 열세였다(표 3). 일방적인 학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27) 한나 아렌트/김정환 역, 폭력의 세기, 서울;이후, 1999, 서평 중.

<표3> 5월 26일 밤 시민군 배치상황과 계엄군 배치상황 비교

시민군의 배치상황		계엄군 배치상황		
장 소	내 용	타격목표	부 대	병 력
도청	시민군, 기동타격대, 항쟁 지도부, 학생 등 200-500여 명	도청 광주공원 YWCA 전일빌딩 관광호텔	3공수여단	14/66
YMCA	고등학생 등 60여 명이 총기조작 훈련 중 새벽 3시경 도청 진입		7공수여단	33/224
YWCA	여성 50여 명, 경비담당 20여 명		11공수여단	4/33
전일빌딩	40여 명, LMG 기관총 설치		"	"
전대병원 옥상	수 미상, LMG 기관총 설치	광주시 전지역에 대한 분할점령	공격부대 : 20사단 : 31사단	252/4,035 56/693
유동삼거리	10여 명(본부인원)			
계림국민학교	30여 명의 병력이 배치됨			
서방시장	수 미상			
학동, 지원동	30여 명의 시민군 및 예비군			
덕림산	20여 명의 본부인원, 지역 예비군	의곽봉쇄	보병학교	24/548
			포병학교	36/620
			기갑학교	19/1,522

\* 출처 : 광주민중항쟁과 민주주의·인권 그리고 평화, 최정기.

\* 계엄군의 병력 상황 중 00/00은 장교 수/사병 수를 의미함.

이때는 이미 항쟁의 초기국면에서 발휘되었던 대중들의 자생적인 저항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저항적인 공동체는 내부 차이와 분단체제를 동원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분열된 상태였다. 광주시민들이 갖고 있던 도덕적 정당성은 여전하였지만, 그것을 자생적 저항으로 표출하기에는 너무나도 냉정한 계산이 각자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대중의 역동성이 표출될 수 있는 계기는 해방공간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5월 18일 이후 21일까지 전개되었던 대중적인 저항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 결과 27일 새벽의 광주를 지킨 것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6일 밤 도청으로 들어간 수 백 명의 무장시위대였다. 이들의 참여는 확실히 그때까지의 참여와는 구별되는 행위였다. 당시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진입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또 그때까지 계엄군이 해왔던 행태로 보아 다시 한번 처참한 유혈극이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따라서 마지막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그러한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의한 참여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의 참여는 그전 시기까지의 참여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각종 자료에 나타나는 최후 참여자들의 증언에서는, 계엄군에게 승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최후까지 항쟁한 시민군들은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죽음을 통하여 5월 18일 이후의 대중적인 저항을 저버리지 않으려 했다. 사실 이들은 윤상원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5월 18일 이전까지 사회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냉정한 상태에서조차 죽음을 각오하고 무장투쟁에 가담한 것은 전적으로 10일간에 걸친 경험의 결과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소중한다는 것을 죽음을 통해 보여주하고자 한 것이다.

27일 새벽에 전개된 계엄군의 무력진압으로 몇 명이 사망했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 당시 계엄군 측의 발표는 “무기를 내놓기를 거부하다가 사살된 사람은 17명이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사망자에 대한 군부대의 보고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이 보고 자체가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그 후 1980년대 말의 확인작업에서 이름이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사망자 수가 30명 정도에 이르며, 1989년 6월에 발표된 미국행정부의 성명서(미국 정부, 1989년 6월)나 그 외 대부분의 자료들은 당시 사망자가 30명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군 진압작전으로 최소한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 제3장 광주민주화운동과 기념행사

### 제1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성립과 전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이래 광주에서의 5월은 다른 지방과 달리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매년 5월이면 망월동 묘역을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사들, 어김없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규모의 군중, 다양한 문화 형식의 동원 등은 광주의 5월을 특징짓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광주의 5월이 다른 지역의 5월과 구별되는 독특한 양상을 보여 왔다고 할지라도 이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변화를 겪었고 아주 최근이야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이자 지역 축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광주시민들에게 5월은 해마다 ‘축제’로 경험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를 “시민 축제로 확립해 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은 운동의 산물<sup>28)</sup>”이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을 살펴보고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전개과정을 크게 억압기, 전환기, 개화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5월 단체의 현황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공식적인 5월 단체는 5·18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의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태이며 각종 5월 기념행사도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1994년 8월 창립되어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헌신하고자 5·18관련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의 일부와 국민성금으로 1994년 8월 30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현재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5·18교육, 5·18관련 서적 출간과 자료 수집과 연구, 인권관련 포럼, 광주인권상 시상, 난장人free, 청소년 문화제 등의 5월 관련 행사를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의 설립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보다 공식화되는

28) 정근식,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서울:여름, 1996, p.153.

계기가 되었으며 난립하였던 각종 단체들의 5월 행사에 대하여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980년 5월 31일,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유족들을 중심으로 5·18광주의거 유족회 창립을 효시로 한다. 후에 행방불명 가족들이 단체에 합류하게 되고 2004년 4월 3일, 5·18민주유공자 유족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불행은 되풀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다시는 이 땅에 ‘광주학살’과 같은 불행이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sup>29)</sup>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추모제, 추모글 모음집 발간, 묘역 참배 등 주로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적 성향이 강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가족들 간의 교류와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광주시 남동 무진교회(담임목사 : 강신석)에서 부상자 18인이 모여 만든 ‘5·18부상자회’가 그 시초이다. 후에 1998년 사단법인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법인 등록 후 2003년 기존의 법인을 해산하고 국가보훈처장의 단체설립 허가를 받아 현재의 명칭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로 변경하였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기념식 참석, 표지석 관리, 민주성지순례 행사, 전국회호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5·18유공자유족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5·18구속부상자회는 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관련된 대외적 활동은 미비하다.

## 2.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전개

### 1) 억압기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유래는 80년 5월 항쟁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항쟁

---

29)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정수만, 민주유공자유족회 인터넷홈페이지 회장인사말 중.

기간이었던 21일 계엄군이 시외곽으로 물러나고 도청이 시민군들에 의해 장악된 22일 여기저기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은 도청으로 옮겨졌는데, 신원이 확인된 사체는 도청 앞 상무관으로 옮겨졌다. 유족들은 이때 사망자들의 장례를 27일 도민장으로 치를 것을 계획했지만 27일 계엄군이 다시 진입, 이들에 의해 광주가 완전히 재장악된 후 모든 시체는 그들이 재검사하여 29일 청소차에 싣고 망월동으로 옮겨 갔다. 이 날 망월동 묘지에서는 모두 126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유족들은 31일 삼우제를 지내기 위해 망월동 묘지에 모였는데 이 때 「5·18 광주의거 유족회」가 만들어졌다.

「유족회」가 발족한 80년 5월 31일은 계엄사가 ‘광주사태의 전모’를 발표, 광주사태를 “김대중의 배후조종을 받은 폭도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몰아부쳤던 날이었고, 또 당시는 항쟁이 막 진압된 터라 어느 누구도 ‘큰소리를 내어’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없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조차 기피했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는 고스란히 유족들의 몫이었다. 결국 서로가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야 했고, 서로 이름도 모르는 유족이었지만 같은 처지라 금방 친해졌다.<sup>30)</sup> 그러나 유족회의 활동과 주장은 광주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나 진상규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족회는 끊임없는 와해 공작에 시달려야 했다. 유족회가 사무실을 만들고 현판식을 가지려 했을 때조차 행정기관, 경찰, 정보기관 등 관련 당국이 총동원되어 필사적으로 이를 방해해 끝내 현판식은 커녕 간판도 걸 수 없었다.<sup>31)</sup>

유족회는 1981년 5월 18일 망월동 묘역에서 1주기 위령제를 갖기로 했으나 정부 당국의 방해와 회유로 무산되었다. 사전준비를 맡았던 회장단이 슬그머니 공무니를 뺐던 것이다. 당국에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권유했지만 유족들 중 일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망월동 묘지에 모여 들었고 “제사도 못지내게 하는 놈들”이라며 분노와 울분을 토해 냈다. 이날 추도식은 유족 중 한 명인 정수만씨가 즉석에서 추도사를 작성, 대학생들과 함께 추도사만 덩그러니 읽는 약식으로 진행됐다.

망월동 묘지를 참배한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배가 끝난 후 도청 앞까지 가두행진을 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고 일부만이 버스를 타고 나와 산발적인 행진을 벌

30) 한국현대사료연구소, “5·18 광주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 「역사와 현장 1」, 김세균 편, 광주;도서출판 남풍, 1990, p.693.

31)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서울;사계절출판사, 1988, p.276.



었다. 추도식이 끝난 후 유족들도 개별적으로 참석한 대학생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였는데 이날 시위는 약 2,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50명이 연행되었으며 구속자 가족들은 광주 미문화원에 들어가 농성을 하다 밤 11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sup>32)</sup>.

한편 천주교 사제들은 광주항쟁 직후부터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광주대교구는 항쟁 진압 후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미사를 갖고 광주항쟁과 관련해 강론이나 기도를 해왔다.<sup>33)</sup> 광주교구 사제단은 1981년 5월 9일 ‘광주사태 1주기를 맞는 우리의 주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10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합동미사를 집전했으며, 5월 18일에는 35명의 사제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를 마치고 가톨릭센터에서 일주일간 단식 기도<sup>34)</sup>를 했다. 이날 「기독교청년협의회」도 광주항쟁 1주기 분향소를 설치했으나 경찰이 난입하여 십자가, 모금함, 촛대 등을 압수해 갔다.<sup>35)</sup>

1982년 5월은 이해 3월 18일에 문부식, 김현장 등에 의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4월 5일에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이 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5월을 맞았다. 5월 초부터 광주시내에는 ‘광주민중봉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유인물이 살포되어 1980년 당시의 기억을 재생시키려 했으며, 18일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의 ‘광주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대한가톨릭학생 광주대교구 대학생연합회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견해’, 광주사태가족일동의 ‘5·18 2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주장’ 등 성명이 잇따랐다. 5월 18일 망월동의 위령제에는 젓상이 등장함으로써 ‘의례화’ 되는데 집시법을 근거로 추모제를 막고자 한 당국에 발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 해 5월에도 개신교와 천주교 등에서 추모미사와 예배가 열렸는데, 18일 경찰은 광주 YWCA 회관에서 2주기 추도예배 후 해산하려는 참석자들 중 14명을 연행해 갔다.

32) 김영택, “망월동의 한을 지키는 사람들”, 「여성동아」, 1987. 9. pp.274-277.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서울;폴빛, 1985, pp.251-254.

33) 광주교구의 월요미사는 광주 남동성당에서 1년 남짓 계속되었다.

정문영, “광주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9), p. 21.

34)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며 “우리는 단식기도를 통하여 유가족들의 슬픔과 시민들의 피맺힌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며 동시에 구속자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5.18사료편찬위, 1997, p.215).

35) 김영택, “망월동의 한을 지키는 사람들”, 「여성동아」, 1987, 9, pp.264-267.

천주교 광주대교구도 남동성당에서 추모미사를 봉헌, 신도 1,000여명이 연좌농성을 벌였다. 1982년은 또한 작자미상의 ‘5월의 노래’<sup>36)</sup>와 ‘님을 위한 행진곡’<sup>37)</sup>등 5월 광주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불러지면서 투쟁이 문화적 영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38)</sup>.

1983년에도 5월 18일 망월동 묘역에서 유족들을 중심으로 3주기 위령제를 거행하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남동성당에서 추모미사가 행해졌다. 이 미사 중 광주대교구 사제단의 광주항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광주항쟁 3주기를 맞아’와 정의평화위원회의 ‘영원히 살아있는 혼들에게’가 발표되었다. 또한 구속자 가족들도 ‘광주항쟁 3주기를 맞이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3년 전 광주에서 있었던 만행을 규탄했다. 그러나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를 우려한 안기부, 보안대, 경찰 등 당국이 「전남지역개발협의회」를 앞세워 묘지의 분산 이장공장을 진행시켰고, 이 문제를 놓고 유족회가 분열 위기를 맞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5월 18일 광주사태 3주기 합동위령제가 망월동 묘역에서 유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이날 무등경기장에서는 「전남지역개발협의회」 주최로 ‘광주시민단합대회’가 열리는 등 82년 5월은 당국과 친정부적인 지방 엘리트들에 의한 방해가 본격화되었다. 한편 당국은 이장을 강행하기 위해 온갖 협박, 회유, 공갈책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첫째, 관제 유족들을 동원하여 주로 시외지역에 거주하는 유족들을 찾아가게 하여 이장만 하면 즉시 위로금 1천만원과 이장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회유·설득하게 하거나 둘째, 망월동 공동묘지는 땅이 좋지 않아 물이 들어 시신이 잘 썩지

36) 81년, 문승현 작사·작곡. 노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젓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찢렸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개 핏발 서렸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후략)

37) 황석영 작시, 김종률 작곡. 노래 ‘넋풀이’의 마지막 곡으로 만들어진 ‘님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항쟁 기간 중 항쟁의 진상을 시민들에게 알렸던 ‘투사회보’ 제작과 ‘항쟁파’의 주축이었던 윤상원과 투사회보 제작팀의 모체가 된 ‘들불야학’의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바쳐졌던 노래였다. 박기순은 광주항쟁 발생 직전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했고 윤상원은 80년 5월 27일 도청 사수 중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82년 2월 20일 이들의 영혼결혼식을 전후해 작가 황석영 등이 노래극을 준비하며 이 곡을 만들었으나 노래극은 상연되지 못하고 노래극 테이프만 제작되었다고 한다(전사연, 1991).

38) 정근식, “5월 ‘행사’에서 ‘축제’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전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지역사회학회, 1998, p.143.

않으므로 빨리 이장하지 않으면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공갈을 하고 셋째, 지서장, 면장,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 유지라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는 방법을 썼다<sup>39)</sup>. 그러나 망월동의 위령제에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어났고 당국의 대응도 더욱 치밀해졌다.

이 당시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움직임은 그리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는 운동권 학생들의 상당수가 1980년 5월 항쟁 발발 직전 예비검속을 피해 광주 밖으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항쟁과 관련하여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정보기관의 학원사찰 또한 극심했기 때문이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1980년 봄에 공개되었던 많은 동아리들이 대부분 파괴되었고 나머지는 비합법화되어 자취방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981년 1주기 투쟁의 중요성이 학내외로부터 제기되나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는 준비 부족과 역량 미흡을 이유로 투쟁을 조직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운동 지도부는 조직 보호를 위해 참가하지 않은 채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망월동을 참배하고 추도식에 참여했으며, 추도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유족 및 참배객들과 시내에서 인도를 따라 침묵시위를 벌였다. 82년과 1983년 5월 역시 대학생들은 조직적으로 5월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1982년 5월에는 학내에서 추모제만 치러졌고 83년 5월 10일에는, 18일에는 전경들의 경비가 삼엄할 것을 대비 이 날 시위를 조직했으나 단 5분만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18, 19일은 경찰의 삼엄한 경비에 꿈쩍도 못하고 학내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소규모 시위만 벌이다 끝나버렸다<sup>40)</sup>. 1981년부터 1983년까지 3년 간은 유가족과 천주교 및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추모와 단식투쟁이 5월의 주된 양상이었다. 유족들의 추모가 간혹 대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연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 수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고, 또한 당국의 탄압과 회유, 그리고 분열 공작으로 인해 위령제나 추도식조차 온전히 치러지기 어려웠다. 추도식을 치르러 가는 중에 경찰에게 플래카드는 물론 심지어 꽃바구니까지 빼앗기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부의 고위 인사가 광주에 내려오는 날이면 연금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는 차량에 태워 경상도나 강원도로 강제 여행을 해야 하기도 했다.

1984년 봄은 소위 유화국면으로 특징지어진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

39)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서울:폴빛, 1985, pp.253-254.

40) 송행희, 「전남대학생운동사-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83년 말까지」, 전남대학교, 1991, p.56.

이 예정되어 있어서 정부는 어느 정도의 유화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sup>41)</sup> 학원의 경우 2월 29일 문교부 장관의 학원자율화 신장방침에 따라 1980년 5월 17일 이후 학원에 상주해 있던 경찰력이 전원 철수함에 따라 각 대학은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학자추)가 결성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학생운동권은 급속한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광주 지역의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남대학교의 경우 4월 19일에 「학자추」가 결성되어 학원민주화와 총학생회 부활을 준비했고, 5월 1일 「민주회복추진위원회」(민회추)로 개편되어 ‘5월 투쟁’을 준비했다.<sup>42)</sup>

「민회추」는 5월 1일 학내에서 ‘5·18 위령제 및 추모식’을 주최했는데, 이들의 추모행사에는 햇불 행진, 진혼제, 마당제 등이 선보였다. 전남대 도서관 앞 광장에 ‘5·18 광장’이라고 쓰인 현판을 내걸고 학교 당국에 5월 15일까지 5·18추모비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국의 망월동 묘역 이장 공작에 반대하여 “5·18 영령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의 집회는 종종 학교 당국 및 교수들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민회추」는 5월 14일 성명서를 내고 “학우여! 우리는 역사진보의 동력인 민중의 힘으로 유신독재 잔당의 총칼 앞에 분연히 항거하여 피를 뿌리며 쓰러지던 5월 민중봉기의 광장에 다시 섰다”며 “5·18 민주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이 땅의 진정한 민주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선동했다<sup>43)</sup>. 이들은 또 14일부터 26일까지를 ‘5·18 추모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 동안 여러 명칭의 추모 집회와 시위를 전개했다. 학생들은 5·18 진상규명과 추모비 건립을 위해 주로 철야·단식 농성을 했는데 이러한 농성에는 으레 개사곡, 촛극, 살풀이 춤, 마당굿 등이 동원되었다. 물론 학생들의 집회는 경찰의 봉쇄로 학외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학내 시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으며 시위가 학외로 진출하더라도 한곳으로 집중되기 어려웠고 산발적으로만 벌어졌다.

1985년에도 5월 18일 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망월동 추모제는 치러졌다. 이날 추모제를 마치고 망월동을 빠져나오던 유족들과 시민들의 평화적인 행진은 마을과 숲 속에 잠복해 있던 전경과 사복경찰의 급습을 받아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등 아수라장이

41) 정근식, “5월 ‘행사’에서 ‘축제’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1998, p.143.

42) 김원희, 「전남대학교 학생회의 역사」, 전남대학교, 1998, p.42.

43)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항쟁」, 1997, p.388.

되었으며, 남동성당에서 추모미사 후 5백여 명이 시위를 벌여 이날 광주시내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운이 감돌았다고 한다. 당시 광주시내에는 ‘5월 쿠데타가 일어난다더라’, ‘쌀과 라면을 사두어라’, ‘미국의 CIA 요원이 5월을 어떻게 넘기나 관찰하러 왔다’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나돌았는데, 아마도 이러한 유언비어가 돌았던 것은 당시 5만여 명의 병력이 광주에 배치되는 등 살벌한 분위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sup>44)</sup>. 한 문헌은 “그날의 참상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공포 분위기다. 시민들은 귀가를 서두르고, 비가 내리는 보도와 차도에는 전경과 정체불명의 사복들이 활보를 하고, 반면에 시민들은 주눅이 들어 마치 공포에 질린 듯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라며 당시의 숨막히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sup>45)</sup> 이 해 전남대에서는 총학생회가 출범했고 이후 처음 맞는 5월이었고 따라서 경찰 당국은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더욱 철저히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월동의 추모식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전남대 학생들은 망월동 참배를 결행했고 이는 경찰과의 투석전을 야기했다. 이 날의 시위는 가두시위로 이어졌는데,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외치며 시내 도처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한 이때 시위를 하던 한 학생이 그 장면을 찍고 있던 비디오카메라 기자를 향해 ‘양키 고 홈’을 외치던 장면이 TV 화면에 그대로 방영돼 일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sup>46)</sup>. 이 해 5월에는 특히 광주항쟁에 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기록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가 당국의 탄압을 뚫고 간행되어 항쟁의 사실적 진상규명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sup>47)</sup>.

1986년은 4월에 서울대 전방입소 거부투쟁을 주도하던 이재호, 김세진의 분신과 전남대 교수 43명이 “1980년 광주의 역사적 비극을 경험한 우리는 조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에서 5월을 맞았다. 18일이 되자 망월동에서는 「오추위」 주관으로 유족과 대학생 등 약 1천명이 모여 추모식을 가졌고, 남동성당에서도 추모미사가 행해졌다.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44) 정문영, “광주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8), p.28.

45) 「龍鳳」 16. 1984. p.304.

46) 시사편찬위, 「광주시사」, 1997, pp.124-125.

47) 정근식, “5월 ‘행사’에서 ‘축제’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지역사회학회, 1998, p.144.

로 이러한 회합은 자연스럽게 시위로 이어졌다. 호남 지역 6개 대학 대학생 약 2천명도 5월 14일에 전남대 5·18광장에서 「반제·반파쇼 투쟁 호남 지역 대학연합」 결성식을 갖고 시위를 하는 등 대학생들 역시 5월 투쟁을 준비했으나 정작 일요일이었던 18일이 되자 학내에는 별다른 행사가 벌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는 광주 학생운동권의 주력이었던 전남대 운동권이 신, 구파 투쟁이라는 조직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던 터라 이러한 행사들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81년 이래 유가족, 풀려난 구속자, 종교계의 추모와 투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탄압이 심해지면 그럴수록 투쟁은 격렬해졌으며 이러한 투쟁은 급기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기에 이른다. 5월 당사자들과 더불어 투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대학생 운동권들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시위와 투쟁은 주로 4·19기념일을 전후로 하여 4월제, 4월 투쟁이 전개되어 4·19만 되면 여러 차례 각 대학의 교문은 굳게 닫혔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대학가에서 5월의 열기는 4월보다도 훨씬 격렬한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1980년 이후 4월 투쟁은 5월 투쟁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면 진짜 투쟁은 5월에 전개되었던 것이다. “5월 투쟁—반군부독재 민주화투쟁은 적어도 대학 내에서는 2중 정부, 2중의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것 같았다. 대자보나 플래카드, 시위를 보면, 광주학살 원흉과 파시스트 군부에 대한 타도가 정면으로 외쳐졌고, 그것도 원색적인 표현이 많았다. 많은 경우 그렇게 극성을 부리던 학교 당국은 이때쯤은 속수무책이었다” 48). 그리고 이러한 추모 및 투쟁의 절정은 1987년 5, 6월이었다.

1987년의 정국은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 1월부터 들끓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집회와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4월 8일 김대중과 김영삼의 신당 구상 선언이 이어져 개헌 논의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행 헌법으로 정부를 이양하고 개헌논의는 올림픽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4.13 호헌조치는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각계 각층에서 시국성명, 단식농성, 삭발기도회, 가두시위 등이 잇달았다. 광주의 분위기 역시 다르지 않았다. 더구나 이 해 5월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유언비어로만 떠돌던 80년 5월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사진전을 개최하고 1980년 5월 항쟁 당시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각 성당에서 상영했다.

48) 서중석,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의미”, 『역사비평』, 서울;여름 5, 1989, pp.40-41.

광주시민들은 7년 만에 공개된 빛바랜 사진들과 비디오테이프 속에서 그 날의 참상에 몸을 떨어야 했으며 이러한 분노는 곧 5월 투쟁과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그 한해 내내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의 중심가 도로는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 군중들에 의해 점유되었으며, 금남로는 이후 “군중의 과다를 가능하는”<sup>49)</sup> 척도가 되었다. 물론 이해 망월동에서 행해진 기념행사 역시, 비록 군중의 수는 많이 늘어났지만, 경찰 당국과의 육박전을 피할 수는 없었다.<sup>50)</sup> 그러나 이 해의 폭발적인 투쟁을 계기로 1988년에 이르러 유족과 종교계, 그리고 대학생들에 한정되었던 기념행사는 범시민적인 의례로 발전하는 한편, 광주항쟁 또한 더 이상 ‘불순분자의 책동이나 유언비어에 의해 유발된 폭동’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에 의해 ‘광주학생, 시민의 민주화 노력의 일환’으로 복권되어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 2) 투쟁기

5·18기념행사는 1988년을 계기로 이전의 비합법적인 정치투쟁에서 반합법적인 정치투쟁과 의례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는 6월 항쟁으로 이루어졌던 정치적 자유와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담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종래의 투쟁의 양상에서 추모와 기념과 문화·예술이 접목된 행사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sup>51)</sup>.

이 시기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억압기와 전환기에서 나타났던 공권력과의 일방적인 대립국면에서 치루어졌던 5·18기념행사가 투쟁기에 들어선 1988년의 5·18행사에 평민당이 참석함으로써 권력의 묵인아래 전야제적 성격의 행사가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일대를 일시 점거한 상태에서 치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49) “사상최대군중 錦南路 인파,” 「藝鄉」, no12, 1987, p.168.

50)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광주오월민중항쟁사대전집」, 서울:폴빛, 1990, p.1341.

51) 정문영, “광주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p.31.

이로서 그 동안 5공정권에 의해 불법시되었던 기념행사가 시간적으로는 5월 17일 저녁, 공간적으로는 전남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 일대가 시민들에 의해 일시적인 ‘민주공간’으로 활용되었고, 이때부터의 특정 상징공간의 점유는 이후의 기념행사에서도 당연시되었으며, 동시에 주기적인 점유형태의 기초를 닦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현재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전형을 보여준 ‘5월 문화제’가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5·18광주민주항쟁 제9주년을 맞아 마련된 ‘5추위’ 중심의 민중문화, 예술단체가 참여한 ‘5월 문화제’의 성격은 5·18당시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광주정신을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대중집회 등 투쟁일변도의 기념행사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문화행사의 접목이라는 점에서 1989년의 ‘5월 문화제’는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또 다른 의례적 규범을 만들어 낸 새로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출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52)</sup>

셋째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광주보상법은 한편으로 5·18피해당사자들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면서 5·18의 의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1993년의 5·18당화 이후 5·18묘지 성역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광주시가 1993년에 5·18기념행사를 위한 재정지원을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18행사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광주시장의 망월동 추모제 참석은 5·18 발생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5·18기념행사가 관련단체나 재야의 전유물이 아닌 광주시와 광주시민은 물론 전국민적인 행사로 치러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5월 산업’의 근간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5월의 전야제 행사에는 판소리, 진훈굿, 노래극, 연극 등이 첫선을 보였다. 전야제가 벌어지는 장소에는 시민들로 꽉 메워졌고 호응도도 높았다. 또한 1989년부터 매년 ‘5월 행사 및 투쟁 기간’에는 각 ‘운동권’ 단체들이 자신의 특성을 살려 ‘5월 행사’를 공동준비했다. 미술운동 단체는 민중미술전람회나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문학 단체들은 문학의 밤 행사, 연대시 낭송, 혹은 담벼락에다 자신들이 지은 시를 써 붙이기도 했다. 노래나 연극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

52) 윤기봉, “5·18기념행사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2000), p.78.



램은 대규모 대중집회 계획인데, 가령 5월 18일 도청 분수대 앞에서 대규모 대중집회를 갖는다는 계획이 수립되면 다른 모든 분야의 계획은 여기에 맞춰 짜여진다. 이런 행사에는 ‘운동권’의 모든 역량이 전부 동원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학생운동권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학생운동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특히 이 해 5월 행사부터는 비판적인 문예 단체들에 의해 ‘5월 문화제’가 열려 1980년 5월을 문학, 판소리,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마당굿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형상화했다. 이들 가운데는 거리굿과 가두선전극도 선보여 특정 장소에서 관객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객을 찾아가 굿판을 벌이기도 했다.

“그 때는 정말 좋았어요. 신명도 났고,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죠. 한번은 구동체육관에서 5·18 전야제 행사가 있었는데, 체육관을 꽉 메우고도 부족하여 주변 도로에까지 사람들이 밀려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 나서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그때 느낀 감동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sup>53)</sup>

망월동 참배 또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5월이 되면 망월동 묘역에 참배객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 5월 18일이면 망월동에는 “사람에 치어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그 인원이 전부 시내로 진출해 시위를 하는 통에 광주 시내는 돌바다가 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 당시 5월이 오로지 ‘투쟁’과 ‘분풀이’로만 점철되었던 것은 아니다.<sup>54)</sup> 이 전시민적 투쟁과 저항의 의례 속에서 시민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서로 마주하는”, 일종의 ‘코뮤니타스’(communitas)의 상태<sup>55)</sup>를 경험했던 것이다.

5월 ‘투쟁’ 기간이면 「국본」이나 「광주·전남연합」에는 어김없이 양동시장·대인시장·남광주시장 등 “시장 아줌마들”과 교회나 각 동의 아줌마들끼리 결성한 계나 친

53) 조영훈, “오월을 살리는 오월극단 토박이,” 『龍鳳』, 27, 1995, p.80.

54)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오월민주항쟁사료전집」, 서울:풀빛, 1990, p.1291.

55) Turner, Victor, 이기우·김익두 역, 「제의에서 연극으로」, 서울:현대미술사, 1996, p.213, 정문영, “광주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p.32.에서 재인용.

목회, 동창회에서 주먹밥이나 김밥 따위를 자진해서 만들어 오거나 시장 상인들이 각종 음식물들을 리어카나 트럭 채로 싣고 와 나눠주곤 했으며, 심지어는 속옷, 양말, 잠바, 바지나 담요, 이불 등 입을 것과 덮을 것을 마련해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한편 1987년 6월 항쟁 이후 망월동 참배를 비롯한 5월 행사에 대해 정부가 탄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부터 전국 각지의 대학생 ‘성지순례단’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1988년 5월의 경우에는 갑자기 1만여 명이 넘는 엄청난 수가 한꺼번에 밀어닥쳐 잠자리나 식사 때문에 혼란을 빚기도 했다. 다행히 이들에게 양동시장과 대인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자진해서 김밥, 주먹밥 따위를 리어카에 싣고 와 밥을 굶기지는 않았다. 1989년 5월에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순례단 환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에 대처했는데, 예컨대 미리 전국 각 대학으로부터 방문계획에 대한 접수를 받거나 특정 날짜를 정해 그 기간에 방문을 권유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이 해에도 약 7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광주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혼잡은 없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사회단체, 종교단체, 계모임 등에서도 성지순례계획을 세워 5월 단체에 연락해 오는 경우도 많아졌다. 여기에는 TV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1988년 6월 27일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가 구성되고 1988년 11월 18일부터 1989년 2월 24일까지 ‘광주청문회’가 TV로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또한 89년 MBC와 KBS에서 각각 “어머니의 노래”(1989. 2. 3. 첫방영) 및 “광주는 말한다”(1989. 3. 8. 방영)라는 다큐멘타리가 전국 방송망을 통해 방영되면서부터 운동권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상당수 섞이기 시작했다. 어느덧 망월동 묘역과 도청 앞 분수대는 외지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둘러보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다<sup>56)</sup>.

이제 시위나 데모는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군중들은 아예 시내 중심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거나 서성이면서 대학생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학생들이 나타나면 어김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그동안 익히 보아 왔던 대학생들의 시위를 흉내 내어, 그러나 ‘자신들만의 양식’으로 시위를 전개하곤 했던 것이다. 심지어

---

56) 김종원, “광주정신 살아 있다,” 「월간말」, 서울:월간말, 1995. 5. p.35.

는 정치 문제와 관련된 대중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회 내용을 묻는 전화가 운동단체에 쇄도하는가 하면, ‘왜 이러저러한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느냐?’ 라는 항의하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sup>57)</sup>

이러한 상황은 시위 주변에 모인 군중들이 특정 목적에 의해 시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으며 시위가 마치 하나의 ‘놀이’ 인 것처럼 참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중들의 광범위한 참여는 결코 대학생들의 선동의 결과가 아니었다. 대학생들의 등장은 시민들, 군중들이 기대하던 바였고 대학생들은 단지 군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은 왜,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주에서 항상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인 금남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시대부터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 헌병대 등 각종 일제의 통치기구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금남로와 평행하여 있는 총장로에는 일본인들의 상가가 번성했다.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미군정은 일제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용했었고, 이렇듯 총장로와 금남로 일대에 통치기구가 집중, 포진된 상태는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인 1960년대까지도 지속되었다. 1948년 미군정 하에서 광주미문화원이 들어선 것도 금남로와 총장로에 인접한 황금동이었다. 또한 계속된 도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 일대는 여전히 시내의 중심을 이루었고 상권도 이곳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이 일대에 통치기구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3·1 운동, 광주학생운동 및 4·19 시위 등 지배에 대한 저항과 시위의 장소 역시 이 일대였다. 그리고 80년 5월 광주항쟁은 금남로에 시위와 저항, 투쟁의 이미지를 깊숙히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sup>58)</sup>. 아직까지도 금남로와 총장로 일대는 광주시민들에게 있어 노동과 소비의 중심지로 남아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만의 인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경유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싶으면 순식간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거대한 군중을 이루는 것이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전시민적 항쟁으로 발전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물리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sup>59)</sup>

57) 이재의, 「藝鄉」 1989. 4. p.169.

58) 정호기, “지배와 저항, 그리고 도시공간의 사회사-총장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 연구」 no7, 전남대사회과학 연구소 1996. p.89.

물론 금남로가 자연스럽게 군중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군중들이 아무런 계기없이 가두 투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열망, 분노 따위의 감정 역시 시위에 참여하는 주요한 동기가 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열망과 분노가 곧바로 가두 투쟁이라는 직접적인 행위를 낳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1980년 이전만 해도 군중들은 단지 구경꾼일 뿐이었다.<sup>60)</sup> 이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것은 아마도 80년대 내내 이런 저런 이유로 벌어지는 시위 속에서 그것에 ‘맛을 들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광주시민들은 매년 5월이면 으레 벌어지는 시위에 매우 친숙해졌고 단지 5월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연중 무휴로 벌어지다시피한 무수한 시위들 속에서 그 목적보다는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왔다. 시위의 ‘이념’은 대중 속에 전파되기 어려웠지만 그 ‘분위기’와 ‘맛’과 ‘재미’는 전파되기 쉬웠다. 다소 극단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제 대중적인 시위와 투쟁은 ‘무엇을 위한 것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고 시위와 투쟁은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가능해졌던 것이다.<sup>61)</sup>

59) 임철우, ·황종연, “역사적 악몽과 인간의 신화”, 「문학과 사회」, no42, 1998, pp.664-665.

60) 80년 5월 이후 대학생이나 지식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거리로 뛰쳐나간 유일한 예는 홍기일 열사의 경우일 것이다. 그는 1985년 8월 15일 낮 12시 40분경 광주시 금남로 1가 YMCA와 광주관광호텔 사이 차도에서 “8·15를 맞이하는 뜨거운 무등산이여”라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온몸에 석유를 뿌려 분신, 만 7일에 가까운 사투 끝에 8월 22일 사망하였다. 그는 80년 5월 항쟁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는데, “가난 때문에 겨우 중학을 졸업한” 소위 ‘못배운 사람’이었고 이러한 자기인식은 유인물에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다(cf.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중항쟁」, p.676.).

61) 아마도 87년 5, 6월 며칠 동안 밤낮 없이 계속된 6월 항쟁은 사람들이 시위에 ‘맛을 들인’ 결정적인 계기였을 것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회사원, 부녀자, 중고등학생, 심지어 국민학생 등까지 가세한 이 항쟁 기간 중 시위군중은 경찰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상황을 한 대학생은 다소 과장된 어투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매일 6시 시내에서 투쟁은 초기에는 학생들의 투쟁시작과 더불어 시민이 가세하는 형국이었지만 점차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중심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도로를 점거하고 투쟁을 시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다음날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자정쯤에 학교로 돌아오려는 학생들은 새벽 3시, 4시까지 남아서 싸우는 시민들을 보면서 매일밤을 새워야만 했다. 하루라도 현장에 있지 않으면 편히 잠들 수 없다는 사람, 싸우고 있는 아들 딸을 말리러 왔다가 함께 싸우고 돌아가는 사이좋은 부모형제들, 그리고 나이 어린 고교생들까지……. 밤늦게 투쟁을 전개하다 … 갑자기 검은 덩어리들이 머리위로 떨어지자 좌중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복경찰이 사과탄을 던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덩어리들이 한참을 지나도 터지지 않아 살펴보니 광주시민들이 손수 마련해 온 김밥이었었던 것이다. 싸움을 잠시 멈추거나 싸움이 끝난 후면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지는 김밥, 빵, 음료수, 우유 등이 남아돌 정도로 풍족하여 배를 곯고 싸우는 사람은 없었다. 뿐인가, 목청껏 외치고 힘껏 싸우다 어느 때 배가 고프기라도 하면 아무 식당이나 들어서면 되었다. 배불리 무료로

### 3) 개화기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97년, 전직 대통령의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국가기념일로의 제정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이전의 기념행사의 진행 및 운영은 다양한 단체들의 독자적 행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 시기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를 5·18기념재단이 사실상 주도하게 된다.

1999년 제19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5·18은 인권은 천부적 권리로서 그 어떤 명분과 이념으로도 유린될 수 없으며, 21세기의 역사발전 과정에서의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전제하고, “5·18민중항쟁 19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21세기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5·18정신 계승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으로부터 5·18민중항쟁의 정체성과 기념행사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행사의 기본원칙으로 첫째, 연례적 중심 행사인 추모식, 전야제, 기념대회 등을 강화하는 한편, 5·18기념행사의 의미와 주제의 결합성이 결여될 경우, 이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둘째, 행사의 상업성과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을 배제하며, 넷째, 20주년 행사에 대비하여 기본행사 중심으로 대중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대중 참여의 현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등 여섯 개 항의 원칙을 결정하였다.<sup>62)</sup>

개화기의 기념행사는 기존의 행사에서의 한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2000년 이후의 5·18기념행사를 어떤 방향과 내용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5·18기념행사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5·18정신 계승의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5·18행사의 정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또한 이전의 기념행사로부터 연속되어진 것과 새롭게 추가된 것들의 혼합되었다.

---

먹을 수 있었으니까. 또 있다. 이때만큼 편한 교통편이 없었다. 밤 늦어 이미 버스도 떨어지고 없건만 몸에서 최루탄 냄새가 나면 무조건 택시도 공짜였다. 택시운전사 아저씨들 자신도 차량시위 등으로 한몫 크게 하던 때였으니까.”(유귀숙, “87년 6월항쟁에서 자주적 학생회 건설로”, 『龍鳳』 no24, 전남대학교, 1992, pp.169-170.)

62) 5·18민중항쟁 제1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5·18민중항쟁 제1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자료』, 1999. 4. 27.

전자의 것은 대개 전야제, 추모제, 기념식, 학술행사, 연극공연, 차량시위 재현 등이 그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방송사 주최의 음악제나 록 페스티벌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행사 진행의 특징은 바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노력들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크게 전년도에 열린 행사들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초하여 전년도의 행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는데, 가장 큰 기준은 자체 또는 외부에서든 행사에 대한 참여자의 수와 행사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근간이 되었다.

## 제2절 새로운 5월 ‘축제’의 개발

근래에 들어 전국의 어느 지역을 방문하건 ‘축제’라는 이름의 여러 전시, 공연들을 만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1980년대 들어 국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여러 지역 축제들이 연행되어 왔고 특히나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지역 축제의 연행은 일종의 ‘붐’을 형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이 정치·경제적으로 상대적인 독자성을 지닌 단위가 됨에 따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향토적인 것’ 혹은 ‘지방적인 것’에 대한 관심의 증가라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sup>63)</sup>.

이러한 지역주의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함께 각 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된다. 우선 각 자치단체는 재정 수입에 있어 중앙 의존을 상대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지방 재정이 기본적으로 세원의 확보와 관련된 것인 만큼 지방 재정의 안정은 지역 경제의 부흥과 안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역 경제의 발전이나 지역활성화가 지역민의 생존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산의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첨예한 문제가 되었다는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각 지방은 나름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향적 개발체계로부터 지방 스스로가 계획과 개발의 주체가 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체적인 개발 철학과 미래를 선택해야”<sup>64)</sup>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이 보편화됨에 따라 관광산업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역적 차원에서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게 되었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외래 관광객 유치는 지역 활성화 전략에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 도시관광이 비슷한 소재와 기반구성 등으로 이루어져 차별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외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상대적인 매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근대화 과정은 강력한 동질화의 과정이었고, 전국 각 지방의 관광지 역시 이러한 동질화의 힘에 직면하여 차별성을 잃게 되어 심지어 “시멘트 문화”라는 혹독한

63) 정문영, “광주오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9), p.75.

64)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민중항쟁발전계획」, 1998. p.20.

평가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생각해내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지역 차원에서는 ‘가장 향토적인 것’ 혹은 ‘가장 지방적인 것’을 생각해 내야 했음을 의미한다.<sup>65)</sup> 지방의 ‘전통’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따라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통’은 근대화·도시화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직면하여 사라지거나 또는 사라져야 할 구습(舊習)이 아니라 근대화의 흐름 속에 몰개성적이고 획일화된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해 줄, 혹은 그렇게 기대되는 자원이 되었다.<sup>66)</sup>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전국의 각 지방에서 향토 축제가 연행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이 생존의 단위로 부상하면서 더욱 현실성을 갖게 되었다. 광주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에 마련되는 새로운 여가·관광공간·시설들과 정비될 도시기능 시설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미 시행되거나 이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축제와 행사들을 추스리는 한편, 광주와 호남을 잘 나타내거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축제(festival)나 행사(event)를 개발하여 자연적 환경이나 물리적 시설로 이루어진 관광자원을 활용하면서 이 행사와 축제가 전국적,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새로운 자원이 되게”<sup>67)</sup> 하는 것은 관광진흥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이다.

“5월기념 기간 중 시민단체가 주관해서 열리는 기념 추모행사 또한 빼놓을 수 없는 5월 관광자원이다. 5·18 당일 열리는 금남로 추모집회나 거리굿, 연극, 노래제, 국제심포지움, 그림전, 사진전 등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광주가 아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흥미거리를 제공하는 ‘광주만의 문화 상품’이다.”<sup>68)</sup>

“설국에서 펼쳐지는 삿포로의 눈축제, 서로 물만 끼얹는 태국의 ‘창마이축제’

65) 이해준, 「다시 쓰는 전라도 역사」, 서울;금호문화, 1995, pp.293-302.

66) Hobsbawm, Eric j. 「원초적 반란」, 서울;온누리, 1984, 정문영, “광주오일행사의 사회적 기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9), p.87.에서 재인용.

67)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광주민중항쟁발전계획」, 1998, 3, p.163.

68)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IV, 1997, p.765.



등은 예산타령만으로 돌릴 수 없는 테마와 소재의 문제입니다. ‘광주 5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스럽고 자랑스런 광주 5월 축제를! 축제를 통하여 살맛나는 삶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맞출 수 있으며 지역의 희망찬 역사를 일구어내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sup>69)</sup>

---

69) ,강대권 외, “축제가 있는 세상”, 「고향의 내일을 생각하며」, 광주MBC칼럼문집, 1997, p.246.

### 제3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정치, 사회적 의미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1981년부터 5·18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진상규명 투쟁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상징적인 행사로 자리잡은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시민저항정신의 결집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공동체적 삶을 위한 문화창조의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5·18 이전에는 우리 사회의 문화 형태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5·18 이후에는 ‘자기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적 어우러짐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행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진보적 문화성 일체를 담는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민중문화로의 지향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지난 29년 동안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민중항쟁을 촉발시킨 억압적 상황과 항쟁 정신을 철저히 기억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인식을 통해 대중적 행동의 주요한 동력으로 기능하였다. 1980년 이후 매년 5월이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대규모의 군중과 성지순례단들이 5·18행사 참여를 통한 폭발적인 민중투쟁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광주항쟁 이후 지역민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강화시키는 정치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1980년 이전의 광주는 대체적으로 ‘예향’이라는 지역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을 거치면서 때론 전면적으로 마주치고, 때로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민주화의 성지’라는 뚜렷한 지역 이미지를 정착시켰다. 이것은 매년 5월에 광주에서 전개되는 5·18기념행사가 범시민적 투쟁에 의해 의례적 행사로 자리잡게 되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정체성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민중 문화’, 다시 말해 ‘5월 문화’의 새로운 태동과 전파를 통해 문화화의 한 축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했다. 5월 문화는 80년대 전반기 내내 광주항쟁을 묘사한 대다수의 시, 소설, 음악, 미술 등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여과없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에서 그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1980년 5월의 증언과 예술적 재현 작업은 그 자체가 시대의 분노와 증언과 역사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형태의 민중문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이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출발부터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 속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는데 그것은 정치적 행사와 문화·예술 행사간의 성격과 위상의 논란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한 형상화 작업으로 5·18을 살아있는 현실로 재창조됨에 따라 5·18정신의 광범위한 확산조건이 확보되었으며 결국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분명한 위치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문화적 지역 발전 전략’이 하나의 대안적인 발전 전략으로 인식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화화의 정당성이 마련되었다.

## 제4장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 제1절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

5·18정신계승사업으로서의 기념행사는 당시 5공 정권과 5·18관련단체간의 치열한 힘겨루기에서 출발하여 시민정서의 복합적 국면에서 점차 의례화 되어 갔으며, 결국은 광주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나타난 정치·사회의 제 세력간 힘의 부침과정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점진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하나는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중심의 행사와 다른 하나는 5·18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한정되어 개최되었는데, 이 두가지의 행사는 동시에 중첩되어 진행되었으며, 1989년부터 문화·예술의 장르가 도입된 5월 문화제가 접목됨으로써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정형을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사내용도 크게 추모제와 전야제, 기념식, 종교행사와, 학술행사, 문화·예술행사 및 개별단체들의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추진방식이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21세기에 이른 지금, 현재까지도 올바른 구도와 위상을 제대로 담보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음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1. 행사 내용의 연례적 답습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행사는 초기인 억압기에서는 몇몇 유족들의 추모집회와 가톨릭 종교계가 주도하는 종교집회로 5공정권의 온갖 탄압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후 유화국면의 시기인 전환기에서는 제 민주세력들이 가세하기 시작한 추모제 및 종교단체의 추모행사에 대중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대중성이 확보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민주화와 진상규명 투쟁의 전면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후 투쟁기에 와서는 진상규명 투쟁에 대한 대중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

한 노력의 하나인 민중문화가 접목된 ‘5월문화제’가 1989년부터 추모행사와 접목됨으로써 현재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전형적인 양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9년부터 시작된 5·18기념행사는 때로는 5·18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던 6공정권과 문민정권과도 전면적인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때로는 5·18문제 해결과 전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확대·성장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민중문화가 기념행사와 결합하면서 매년 외형적 규모는 확대되고 있었다. 또한 지역간 화합을 다지는 걷기대회나 달리기 대회, 광주·경기국악단 합동공연, 영·호남음악 협연 등이 이루어지는 등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대중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공유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대중적인 프로그램과 지역 화합 공연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의 결합은 그 동안 기념행사를 자체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로 다채롭게 펼쳐려는 행사위원회의 긍정적인 노력의 한 단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이러한 몇 개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행사에는 행사주관단체나 참가자들이 일부 5·18관련단체나 재야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행정도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5월 정신의 향토적·문화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였고, 5월 문화행사로 뿌리내리기에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어왔음이 지적되고 있다.

## 2. 행사의 산업화 전략 부재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대중집회와 문화·예술행사가 중심이 되어 5·18진실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 등 5·18문제 해결의 5대 원칙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목적 수단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것은 한국민주화과정과 5·18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5대 해결 원칙이 5·6공과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항상 정국 현안의 중심에서 관통해 왔음을 의미하며,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5·18문제 해결에 대한 대중 관심과 동원력의 상징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뿐만 아니라 5·18자체를 산업화 측면에서의 접근은 현재 원론적인 문제제기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을 뿐, 본격적인 논의의 틀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는 포괄적이면서도 어떤 면에

서는 대단히 한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시대 상황 인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인식의 접근은 아직도 한국 민주화가 올바른 형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근간이 되며, 5·18의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난제로 기능하고 있다.

5·18의 산업화는 광주의 주요한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매년 5월이면 5·18묘역으로 모여드는 전국 각지로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집중 조명되는 언론의 관심 등에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의 주요한 관광문화자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나태와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고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이 지금까지 추모와 기념이라는 이원적 구성 형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전국민이 즐겁고 신선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지 즉, 대중들로 하여금 축제와 관광, 문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고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

### 3. 대중참여의 감소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29년을 거쳐오면서 매우 다양한 행사들이 등장하거나 소멸되었다. 그것은 대중들의 행사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5·18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대 상황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광주항쟁은 정국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으로 등장하여 1988년 민화위와 광주청문회를 통해 그 실체적인 진실이 공개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는 민주 대 반민주라는 첨예한 대립구도가 전면에 등장하여 한국민주화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대 전환기였다. 그리고 1995년 5·18특별법 제정 요구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5·18문제는 한국 민주화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국민들은 권위주의정권의 정통성 부재와 부도덕성을 드러내게 만들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대단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198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학과 재야단체들의 망월동 묘지 성지순례가 상징성을 갖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개최된 행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중집회가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문화·예술행사는 대중집회에 비해 대중 동원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나 5·18진실을 형상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의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지난 29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대중 참여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의 마련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방향성 등에 관한 충분한 원칙 합의 과정 부재로 행사 추진이 연례적인 수준에 그침으로써 창의성이나 시민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행사가 추진되어 기획력에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국립5·18묘지를 찾는 참배객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가는 현 상황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한 대중참여의 감소를 나타내는 대표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제3절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발전 방안

#### 1. 한(恨)의 정서를 넘어선 축제의 형성

그 동안 1980년 5월에 일어난 ‘항쟁’ 과 그로인해 지역발전에 미친 악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피해의식,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5·18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5·18산업화에 대한 거부정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산업화, 자원화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가 함께 기억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를 회피하기보다는 자존과 긍지로 여기고 도시발전의 자원이요 재산으로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하나의 행사를 위한 의례에서 대동 축제로 바뀌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광주에는 5월 정신의 ‘엄숙함’ 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엄숙함은 5·18기념행사의 산업화, 축제화에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축제란 하나의 관광이자 광주시의 정체성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대상이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산업화에 대한 논의는 광주를 천박한 상업주의적 문화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내적 동력을 5·18축제를 통해 주민자치의 모범도시, 대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공간적으로 표현하자는 것이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통해 광주시민들이 5·18당시 보여주었던 높은 도덕성과 자발성, 공동체 정신을 전국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축제화 한다고 해서 기존의 5·18행사가 가지고 있던 독특한 성격, 즉 저항과 투쟁성을 희석시킨다는 것이나, 이것이 상업화라든가 또는 배타적인 물신주의라고 매도되기에는 현재의 사회 흐름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함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축제의 의미는 과거의 아픔을 현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접근할 때 가능하다. 장기적이고 정제된 행사추진 전략에 따라 그 형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바로 국민들이 거부감 없이 참여하고 바라보고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모와 기념과 축제가 여하히 조율되어 얼마만큼 주도면



밀하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그 형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축제와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모와 기념위의 단선적 행사에서 축제와 관광을 접목한 축제 개념의 행사를 도입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범시민적·범국민적 참여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념행사 및 사업에 절제된 상업성을 연결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성을 제고하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보편적 가치 공유와 유·무형적 자산으로의 승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존의 울분과 불화의 성토장이 아닌 하나의 문화·예술 축제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 2. 전국화 방안의 모색

국가는 독자적인 판단력과 인격을 갖춘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체로서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간에 발생하는 폭력의 개연성을 국가라는 최고기구를 통해 가능한 억제하고, 법이라는 중립적인 규제 체제하에서 사사로운 폭력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sup>70)</sup>.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무엇인가. 우선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와 국민의 동의라는 전제 위에서 최소한도로 행사되는 한에서 그 폭력의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폭력은 사사로운 감정, 증오, 국가의 자기 이해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 공공의 복리라는 더 큰 가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sup>71)</sup>. 그러나 실제로 국가는 사회적 강자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옹호하기 위해 부당한 폭력을 행사해 왔으며, 각종 사적폭력을 조장해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가폭력은 냉전체제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세계적인 냉전적 흐름은 우리나라에 분단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국가에 의해 강요된 형태로 확산되었다.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중심가치로 내세워진 반공주의는 ‘빨갱이’라는 국가정체성을 오염시키는 인종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빨갱이는 새로운 국가의 정통성에 반하는 인종으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한 폭력은 국가의 정통성의 유

70) 김동춘, 「근대의 그늘」, 서울;당대, 2000. p.22.

71)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서울;책세상, 2000, 서평 참조.

지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sup>72)</sup>.

국가는 주민의 자격을 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규준화를 실시하였는데 그러한 기준 자체가 매우 유동적이고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성에서 남한의 주민은 희생당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의 43항쟁을 들 수 있다. 국가가 공권력을 폭력의 형태로 행사하면서 주민을 국가통치 이념에 순응하도록 변화시킨 것이다. 빨갱이라 규정지어진 사람들은 몸을 절개, 강간, 살해 등을 당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폭력의 행위자들은 국가에 순응하게 만들었다<sup>73)</sup>.

또한 43항쟁이 일어난 이후에도 반공을 국가 이념으로 하는 억압 체제하에서 학살의 진상은 철저히 왜곡되거나 숨겨져 왔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들이 빨갱이로 조작되는가 하면 공권력에 의한 범죄행위를 은닉, 왜곡되고 날조되기도 하였다. 그 가족들은 연좌제에 묶여 제대로 공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하해야만 하였다<sup>74)</sup>.

1979년에 발생한 부마항쟁은 4·19 혁명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시민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75)</sup>. 부마항쟁과 5·18은 발생과 전개, 그리고 종료에 있어서 국가폭력과 이에 따른 시민의 저항이라는 동일한 유형을 보여준다. 부마항쟁을 촉발시키고 진압시킨 것은 유신체제의 국가폭력이었으며, 그 지배세력을 교체하여 재차 독재체제를 유지하고자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키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와 전남의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권력쟁취라는 중요한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폭력이 더욱 잔인하고 강하게 작용되었으며 이에 시민들 또한 더욱 격렬하고 과감한 무장투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여 진다.

반공이데올로기가 국민적 강령과 이념, 국민적 생활신조, 도덕과 가치의 중심 기준이자 사실상 명실상부한 국시로서 통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한국전쟁이라는 체험과 연장선에 있다.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된 레드 콤플렉스는 국가폭력의 참상, 오랫동안 우리를 움아매운 억압기제, 그로 인해 조장된 불신과 편견, 황폐화 된 정신 등, 이 붉은 색의 가공할만한 인간파괴의 실상과 인격 분열증적 증상은 국가 권력의 집단적 광

---

72) 상계서. p.7.

73)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창작과 비평」, 1998 겨울호, 경기; 도서출판창비, p.351.

74) 역사문제연구소,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9. p.148.

75) 김성국, “부마항쟁으로부터 5·18을 거쳐”, 부산대학교, 2003년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5·18학술 세미나 자료집, p.74.에서 재인용.

기에 의해 배제된 인간 이성의 슬픈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광적인 반공과 레드콤플렉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지배논리는 모든 죄악에 면죄부였다<sup>76)</sup>.

4·3항쟁 때도 미군정은 남로당이 주민들을 선동한다고 판단하였고 제주를 ‘붉은 섬’, ‘주민들의 90%가 좌익’ 이라고 판단을 내린다. 우선 미국은 ‘불순한 섬’ 이라는 지역 편견적 시각으로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억압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본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남조선과 일본의 경제분리라는 초기 경제정책의 직접적 타격은 물론이며 민중의 생존권마저 위협했던 단기간의 강제미곡수집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77)</sup>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난폭한 폭도들이 분순인물 및 간첩의 사주를 받아 일으킨 난동으로 매도하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데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였다.

우리민족은 냉전체제의 산물로 분단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분단체제에서 국가는 억압의 기제로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웠고 이를 지배주도세력의 취약했던 정통성을 확보를 위해 사용하였다.

항쟁이 발생한 장소나 시기는 다르지만 제주4·3항쟁,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의한 민중의 희생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항쟁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폭력, 인권 등에 대한 논의는 전국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당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항쟁들을 지역적, 개별적 사건으로 이해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운동, 민주화운동이라는 큰틀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 3.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 인권문제와의 연계

5·18은 위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광주민주화운동과 인권문제를 논리적으로 연계시키는 치밀하고 섬세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구현되었던 정신들이 인류의 최고가치인 인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문제라는 폭넓은 주제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1998년 5월 전야제에서 발표되

---

76) 조현연, 전계서, p.43.

77) 상계서, p.45.

었던 아시아인권선언은 이러한 노력의 단초이며 99년 5월 행사에서 추진되었던 동아시아 국가폭력피해자연대모임 등은 광주가 인권도시화로 나가는 올바른 길이지 않은가 생각된다. 광주의 5월 단체들이 제3세계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국제연대사업을 전개한다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광주정신의 위대성은 많은 나라에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행위를 억제하고 인권신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국제민중대회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인권기구를 광주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광주시민전체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경험한 민주정신, 인권정신을 스스로 실천하는 정신이 먼저 필요하다. 타 지역보다 의사결정구조가 민주적이어야 하고 시민질서와 생활태도가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광주시민 전체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민주정신을 홍보하는 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 광주시민들 스스로 광주항쟁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외지인들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양민학살 사례는 세계 각국과 국내에도 많이 있다. 이러한 지역들과 인권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연대활동도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미래의 광주 청사진을 위해 학생, 시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시킬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교육의 전형으로 5·18에서 제시된 정신을 승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 발생함으로 인권사업은 관 주도보다는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권의 구체적 문제인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인종문제, 민족차별 등의 인권문제를 학교,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5월 단체의 역할

우리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사건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까닭은 광주민

주화운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건이며, 아울러 이를 수행한 능동적 주체가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출발하였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확산되었으며, 다시 계엄군의 잔인한 학살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자신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쓰러져간 타인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절규와 죽음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항거하는 5월 광주 시민의 무장투쟁은 최고의 시민적 용기와 주체성의 표현이었다. 또한 비록 며칠에 불과하였지만, 해방된 광주에서 실현되었던 그 절대적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 “그것은 공자가 꿈꾸었던 주나라도, 기원전 5세기 아테네도, 기원후 18세기 파리도, 20세기 모스크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타인의 죽음과 고통에 목숨을 걸고 응답하려는 용기 위에 기초한 공동체였다”는 발표문은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준다.<sup>78)</sup>

신군부가 5·18을 진압하고 권력을 찬탈하였을 때, 모든 것은 순조롭게 끝날 것 같았다. 그러나 광주시민과 이 땅의 청년, 학생, 지식인, 성직자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5·18의 불씨를 처음으로 당긴 학생들은 물론, 계엄군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택시기사들, 그들에게 밥을 먹인 시장의 상인들, 헌혈하기 위해 팔을 걸어 부친 술집 여인들, 그들의 팔에서 피를 뽑은 의사와 간호사들, 누구 하나 518을 잊지 않았으며, 살아남은 자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다. 그들은 5월 광주에서 죽어간 자들을 위해 망월동에 헌화했으며, “사랑과 명예와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간 남들을 따라 가겠노라”고 노래했다.<sup>79)</sup> 그리고 “아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 죽음과 죽음을 뚫고나가 /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 불사조여 불사조여”라고 눈물지었다.<sup>80)</sup> 5·18은 고통받는 타인의 절규 앞에서 차마 눈감지 못하고 나섬으로써 시작되었고, 무고하게 그리고 말없이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대한 살아남은 자들의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자각으로 마무리 된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 모두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자각을 통한 인

78) 김상봉, “응답으로서의 역사 -5·18을 생각함-”, 『전남대학교 철학과 5·18기념학술심포지움 발표문』, 2006, p.6.

79) 백기완·황석영 작사, 김종률 작곡, 「님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일부임.

80) 김준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전남매일신문, 1980, 6, 2.

간의 존엄성을 지킨’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민주화의 성지’에 살고 있는 광주의 5월 단체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기념행사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5월 단체들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반 시민들과 광주민주화운동과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현재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억의 재현은 대부분 5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5월 이외의 행사의 경우, 각 단체의 자체 행사 등에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근현대사의 역사적 산물로 보다 확실히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는 5월 외의 기간 중에도 지속적인 대외적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5·18기념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사이트<sup>81)</sup>의 운영은 바람직한 예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의 광주민주화운동교육 강화, 연극, 문화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5월 정신에 대하여 바로 알고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과거 5월 단체들 간의 주도권 경쟁, 그리고 현재 도청 본관 철거 문제로 불어온 다툼은 5·18에 대한 타시도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에게서도 5·18이 5월 단체들의 ‘사유적’ 사건이라고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 본관 철거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간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그리고 철거에 찬성하며 농성 중인 이들 단체를 완력으로 해산시키려 한 5·18구속부상자회와의 충돌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각 단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 중인 아시아문화전당은 현재 중지된 상태이며 관련 부처와 타 시민단체들도 5월 관련 단체들 간의 다툼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철거와 유지에 대한 의견을 쉽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5월 단체들은 소모적 다툼을 종결하고 대화와 토론, 외부 단체와의 다양한 협의, 공청회 등의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월 단체들만의 것이 아닌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 모두의 역사이기 때문이

81) [www.518edu.org](http://www.518edu.org), 5·18관련 서적, 교과자료, 사적지 안내, 사이버분향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

## 제6장 결론 및 제언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광주 - 권력에 의한 학살과 시민의 저항 및 자치권력’의 경험이 드리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딛고 지배권력을 쌓아올렸던 세력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한시도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에 그때부터 과학적인 이론과 강력한 조직을 갖추고 성장하기 시작한 사회운동 진영과 진보적인 움직임은 모두 광주에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으로부터 출발했거나, 적어도 심대한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만큼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사회의 지배의 역사에 있어서나, 변혁의 역사에 있어서나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인권운동사에 커다란 ‘유산’을 남겨주었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그 기념행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1.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미국

‘5·18’에 대한 경험은 한국의 사회구조 및 외세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광주민주화운동은 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갖고 있던 지배적인 지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기존의 지배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과 반미운동의 무풍지대라고 알려져 있던 한국에서 반미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1980년대 초반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온 몸을 던져 제기한 ‘광주학살의 미국 책임설’은 아직도 그 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며, ‘과연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서두를 장식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확장은 1990년 말에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는 ‘동아시아인권대회’에서 확인된다. 동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오키나와, 대만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1945년 이후 미군이 진주했으며, 그 결과 해당 사회의 모순구조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역사적 공통점을 갖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여러 국제행사를 통해



동대회가 결성되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동대회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후의 기념행사는 한국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가 단순히 일국적인 수준에서 달성될 수 없으며,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수준, 나아가 세계체제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미국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평화운동의 주요 이슈인 미군문제나 반전반핵 운동은 그대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기념행사의 고민을 계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2.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기념행사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민주화 및 과거청산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1980년대 초, 수십년 동안 집권한 동아시아의 독재체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저항과 봉기의 물결은 곧 이들 정권들을 변형시켰다. 광범위한 민주대열의 대중적 지도자들인 김대중과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가 한국과 필리핀에서 각각 승리한 역사의 근저에는 ‘5·18’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민중운동이 등장했다. 38년 동안이나 대만을 억누르고 있던 계엄법이 철폐되었으며, 버마에서는 1988년 3월 학생들과 소수 민족들이 랭군의 거리를 점거하고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1989년 중국에서는 ‘천안문사태’라고 불리는 학생들에 의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1990년 4월에는 네팔에서 있었던 50일 동안의 시위로 국왕이 민주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도 했다. 1992년 5월 태국에서는 영향력있는 야당 정치가가 벌인 20일 동안의 단식투쟁에 자극을 받아 수천의 사람들이 거리시위를 전개하였다. 1998년 인도네시아에서는 학생들이 “민중권력 혁명”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수하르토(Suharto)정권이 전복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저항들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독재체제 등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지배권력의 존재가 평화체제 구축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라는 사실이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체제의 구축

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체제만이 평화체제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사회운동이나 불만의 표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체제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역시 광주민주화운동과 기념행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3. 저항공동체의 경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20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혁명적인 열망과 행동이 광범하게 확산되는 가장 중요한 모범사례였다. 항쟁의 자발적인 연쇄반응과 공적인 공간의 거대한 점거는 단일한 유형으로 행동하는 수 백만의 일반 민중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했음을 표출하고 있다. 그것은 민중들이 사회와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직감적으로 믿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5·18’ 참여자들은 이것을 ‘절대적 공동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인류는 우리가 직감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것, 즉 자유를 위한 본능적인 요구를 가지며,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집합적인 현상으로 승화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본능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저항공동체는 민주주의와 인권 및 평화 개념을 위해서도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그것은 첫째, 저항과 사회질서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근본적인 질문을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회과학이나 사회사상에서는 저항이나 사회운동이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그러한 무질서 상태는 그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한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저항공동체는 무질서가 아니라 자율적인 질서를 의미하였으며, 그 속에서 구성원들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요된 질서와는 다른 의미의 삶을 경험하였다. 이것은 소중한 역사적 경험이라 생각한다.

둘째,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한 공동체의 경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상은 기존의 ана키스트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고민하였던 것들이며, 역사적으로는 프랑스의 파리코뮌에서 시행되었던 적이 있었다. 1980년 광주의 경험도 비록 10일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러한 경험이나 상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보다

나은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기억투쟁과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

광주의 경험 중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기억투쟁이라 할 수 있다. 즉 광주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뒤바뀌는 기억투쟁을 추진한 것이다. 대만이나 오키나와,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5·18'의 경험 및 그것을 승화시킨 운동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중요한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역시 해당 국가의 군사독재 및 파쇼세력에게 학살과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억압을 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전 시기에 걸쳐 광주에서 진행되었던 「진상규명 투쟁 및 '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이나 그 이후의 보상 및 기념사업 등은 어쩌면 이들 집단이 마주칠지도 모르는, 아니 싸움을 통해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집단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그 이후의 기념행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동지적의 표현이며,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다양한 연대활동은 그 심도와 깊이를 한층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주의 경험은 「5·18특별법」 제정 및 당시 신군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통해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면서 독재권력의 최고 통치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초 및 역사적 경험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보복적 차원을 넘어서 정의를 실현한 사례이며,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독재체제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투쟁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개념 및 그와 관련된 체제의 구축에 중요한 이유는 단지 그것이 갖는 역사적 교훈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독재와 억압체제, 대량학살 등 사회적 수준에서나 개인적 수준에서나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사건들로 가득 찬 20세기를 넘어서 21세기에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억투쟁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체제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실례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전쟁기의 민

간인학살사건의 유가족이나 1970년대 독재체제의 피해자들은 그와 관련된 기억투쟁과 기억의 해법이 없으면 그 사회를 인간이 살 만한 사회라고 말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광주의 경험은 기억투쟁과 관련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 사례가 될 것이다.

## 5. 맺음말

이제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기념행사는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다. 이들은 더욱 발전된 형태의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광주의 경험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 다른 나라들, 특히 제국주의 및 독재체제의 억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저항을 위한 매우 훌륭한 준거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호남인들만의 기억에서 전국적인 축제로의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전세계적인 민주화의 성지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한국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아냈던 광주만의 독특한 행사, 광주만이 보여줄 수 있는 행사, 광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만이 독특하게 보여주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이 지역의 확고한 문화상품이자, 관광산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5·18정신을 선양하는 산업화, 5·18정신을 교육하는 산업화, 그리고 5·18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산업화의 관점에서 국민과 세계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내용들을 개발하고,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5·18기념행사의 발전을 위해 현재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5·18묘역 참배객 수, 그리고 5·18 피해자들과 관련된 보상과 재단의 운영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전국화 시키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타시도민들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조사가 실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마

항쟁, 제주4·3항쟁 등과 관련하여 그 내용상의 공통점을 파악하고 향후 기념행사, 근현대사 연구 등에 활용한다면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편, 「광주민중항쟁 비망록:망월동 묘비명」, 광주;도서출판 남풍, 1989.
-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편, 「5·18 광주민중항쟁 증언록-무등산 깃발」, 광주;도서출판 남풍, 1989.
- 강현아, 「5·18항쟁의 이해」, 전남대학교출판부, 2000.
- 광주매일 정사 5·18특별취재반, 「정사 5·18」, 서울,사회평론사, 1995.
- 김동춘, 「근대의 그늘」, 서울;당대, 2000.
- 김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서울;사계절출판사, 1988.
- 김원희, 「전남대학교 학생회의 역사」, 전남대학교, 1998.
- 나간채,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 연구」, 전남대 5·18연구소, 1997.
- 민형배, 오재일 「5·18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의 평가와 전망」,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9.
- 서경주, 「한국의 지역주의」, 서울;백산서당, 2002.
- 송행희, 「전남대학생운동사-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83년 말까지」, 전남대학교, 1991.
- 안종철, 「광주전남지방현대사연구」, 서울;한울아카데미, 1991.
- 월간말, no.28, 1988, 5, 서울;월간말, 1988.
- 윤재걸 편, 「작전명령-화려한 휴가」, 서울;실천문학사, 1988.
- 임영택, 「10일간의 취재수첩」, 서울;사계절, 1988.
-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2」, 서울;역사비평사, 1994.
- 황석영 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서울;풀빛, 1985.
- 한국현대사료연구소, 「광주민중항쟁일지」 서울;한울, 2000.
- 한나 아렌트/김정한 역, 「폭력의 세기」, 서울;이후, 1999.
- Cohen, Abner, "Drama and Politics in the Development of a London Carnival," *Man* 15, 1980.
- Guha, Ranajit, *Elementary Aspects of Peasant Insurgency in Colonial India*,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Victor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Aldine. 1969.

### 논문

- 강은주, "도당제를 통해서 본 공동체의식의 지속과 변화",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6.
- 김광역, "저항문화와 무속의례", 「한국문화인류학」 no.23. 1991.

김상근, “정치사회운동으로서 5월운동의 평가와 계승”, 김상근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김영택, “망월동의 한을 지키는 사람들”, 「여성동아」, 1987, 9.

나간채, 정태신, “항쟁이후 광주지역의 5.18운동 :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5.18운동의 평가와 계승: 심포지움」, 전남사회연구회, 1996.

나간채, “5월 ‘행사’ 에서 ‘축제’ 로”, 「축제, 민주주의, 지역활성화(1998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지역사회학회, 1998.

윤기봉, “5.18기념행사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2000.

임동혁, “광주의 미래와 비엔날레”, 「지역문화축제의 현황과 과제」, 문화저널 창간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1997.

정근식, “지역정체성과 상징 정치”, 「경제와 사회 30」. 서울:한울, 1996.

정근식, “민주화와 5월운동, 집단적 망탈리테의 변화”, 정근식 편, 「광주민중항쟁과 5월운동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1997.

정근식, “청산과 복원으로써의 5월운동”, 정근식 편, 『5.18민중항쟁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정호기, “5.18기념행사와 기념사업”, 정호기 편, 「5.18민중항쟁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정문영, “광주5월행사의 사회적 기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1999.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취재일지:광주사태”, 「월간조선」, no.64, 서울:조선일보사, 1985.

최정운, “폭력과 언어의 정치:5.18담론의 정치사회학”, 「5.18학술심포지움」,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현대사료연구소, “5.18 광주민중항쟁의 사회적 배경”, 「역사와 현장 1」, 김세균 편, 광주:도서출판 남풍, 1990.

## 기타자료

광주광역시, 「5.18기념사업 종합계획」, 1995.

광주광역시,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빛의 도시, 광주 2000」, 1998.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5.18사료편찬위), 『5.18 광주민중항쟁』, 1997.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권』, 1997.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12권』, 1998.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일반사회교육	학 번	20068216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박 지 욱	한문: 박 지 욱	영문: Park Ji-Wook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무등파크맨션2차 1708호				
연락처	E-MAIL: bosspj@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영문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al Plan of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Memorial Ceremon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9년 6월 일

저작자: 박 지 욱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